

아름답
게

N
P
O
의
시
선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NPO 정기지표법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아름다운

N
P
O
의
시
선

누구라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NPO 캠페인기부금

[일러두기]

- 이 문서는 'NPO 정보지식포럼(총 5회차)' 현장을 기록 및 재구성하여 각 포럼 주제를 밀도 깊은 텍스트로 아카이빙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1차 포럼에서 '[패널 Talk]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는 노동, 경제, 지역 분야의 연사(3명)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패널(5명)의 현장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5차 포럼은 활동가 패널과의 대담 대신에 온라인 참가자의 사전·현장 질문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각 포럼 발제의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은 온라인 참가자의 사전·현장 질문을 토대로 진행된 사후 인터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기획 의도

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 분노는 왜 해소되지 않을까요?

2018년, 우리나라 개인 소득 최상위 0.1%는 중간 소득자의 61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임금의 양극화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매일 크고 작은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빈집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높게 치솟는 집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기후위기가 가져온 불평등은 이미 일상을 침범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위기에 대한 실감은 낮을까요? 모두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평등으로 가득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안의 차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NPO 정보지식포럼은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충돌과 적대감의 현상을 살펴보면서,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총 5회차의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총 4가지 요인을 각 포럼(1~4차)의 주제로 선정하여 NPO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5차에서 전환을 위한 사회 재구성에 필요한 NPO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강연들은 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 분노의 요소를 살펴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미래를 그려보며 NPO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로서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빌런’이 업그레이드되었다: NPO 정보지식포럼을 돌아보며”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NPO 정보지식포럼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문을 연 포럼은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그리고 사회 재구성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연사분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화두를 논하고,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들을 수 있었던 뜨거운 열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총 네 가지 요인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명적인 ‘빌런(Villain)’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대단히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존재 ‘빌런’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악당으로 영화,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빌런의 대표적인 예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이하 MCU)의 영화 <어벤져스(The Avengers)> 시리즈의 슈퍼빌런 ‘타노스(Thanos)’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슈퍼히어로 팀 ‘어벤져스’가 빌런 ‘타노스’를 물리쳤지만, 현실에서는 빌런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빌런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런의 업그레이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빌런의 힘 자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피니티 스톤(Infinity Stone)¹ 6개를 모두 모은 타노스가 손가락만 튕겨도 우주의 절반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것처럼, 빌런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빌런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 방식은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타노스는 대의에 대한 신념과 수양딸 ‘가모라’를 잃은 슬픔을 통해 관객들에게 ‘진 주인공’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어긋난 방식일지라도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생명체 절반이 소멸해야 우주를 지킬 수 있다’는 빌런의 신념이 공감을 받으면서 ‘논리적 타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빌런의 논리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네 가지 빌런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극화’는 구조화된 ‘양극 진영화’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양극화(兩極化)’에서 ‘화’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진행형(ing)’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중격차, 최저선이 없는 삶의 문제는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 중인 추세가 아니며 구조로서 공고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화된 양극단의 진영이 상호 대립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는 ‘기후위협’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라는 말도 때늦게 느껴질 정도

1 MCU 최강의 무기이며, 사용자에 따라 무한한 에너지와 우주적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로 주거권, 식량 위기 등 직접적인 문제들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 이 문제들은 사회빈곤층에게 한층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불평등’은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3차 포럼에서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한국인들은 ‘불공정’은 못 참지만 ‘불평등’은 참는다”고 말했는데요. 두 가지 요인 모두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빌런’임에도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최선의 해결 대신에 ‘불공정’과 ‘불평등’ 중 차악의 선택이 강요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결국 ‘불평등’은 ‘불공정’이라는 방패를 앞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용인되는 빌런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네 번째 ‘차별과 혐오’는 공적 이념성을 획득하면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본래 차별과 혐오는 개인이 마음 한구석에 몰래 품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밖으로 표출하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만 표출되었고, 이는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차별과 혐오는 언론매체나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서 여과 없이 발언 되고, 대선에서 득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적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이념성’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빌런이 활개 치는 이 시대에서 시민사회의 고민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 새로운 모색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진행된 5차 포럼에서는 젠더, 탈인간중심주의 등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팬데믹 이후 달라질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빌런의 업그레이드된 현실을 들여다보고 함께 고

민하고 질문하면서 저마다의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는 ‘활동의 자리’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차례

기획 의도 5

서문. '빌런'이 업그레이드되었다: NPO 정보지식포럼을 돌아보며 | 민경배 6

첫 번째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발제 1. 한국 사회 다중격차, 어떻게 풀 것인가? | 신진욱 14

발제 2. 문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 최저선이 없다 | 황세원 21

발제 3.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가는 다리 | 이원재 31

발제 4. 일극중심 사회에서 지역공생 사회로 | 하승수 39

[패널 Talk] 사회 양극화를 좁히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 노동, 경제, 지역 3가지 분야 47

두 번째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발제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과학적·윤리적 이해 | 한재각 58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의 긴급한 요구 | 김윤영 71

발제 3. 폭풍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농민 | 김정열 83

발제 4.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자세 | 정규석 93

세 번째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발제 1.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 | 박권일 104

발제 2. 학력·학벌 차별 반대운동과 시민사회 연대하기: 학력 칸을 넘어 자유와 무지의 세계로 | 윤서 116

발제 3. 교육은 학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운명과 능력을 거스르는 교육에 대하여 | 정용주 125

발제 4. 자본과 국가는 노동의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 윤지영 136

네 번째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들

발제 1. 우리 안의 차별: '나'라는 차별의 공간, 충돌하는 현장으로서의 '나' | 홍은전 148

발제 2. 혐오 조장과 전파의 결절점, 유튜브 | 정수경 158

발제 3. 차별과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혐오를 자극하는가 | 하승우 172

발제 4. 현장에서 길을 찾다: 웃으면서, 혐오에 끝까지 대항하기 | 한채윤 182

다섯 번째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재구성'과 시민사회'

활동의 자리,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

발제 1. 젠더링 뉴노멀: '닭고기의 평등'을 넘어서 | 손희정 196

발제 2. 탈인간중심주의: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경계 넘기 | 은영 208

발제 3. 신호와 감지: 활동의 변곡점을 찾아서 - 2021 NPO 트렌드 리포트를 중심으로 | 박아영·안연정 221

극단에선 사람들 ;

첫

번째

푸

림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노동 · 경제 · 지역의 관점에서

NPO의 사회적 역할 비판하기 · 사회 정책화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1. 한국 사회 다중격차, 어떻게 풀 것인가?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중격차를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1차 포럼에서 다룰 노동, 경제, 지역 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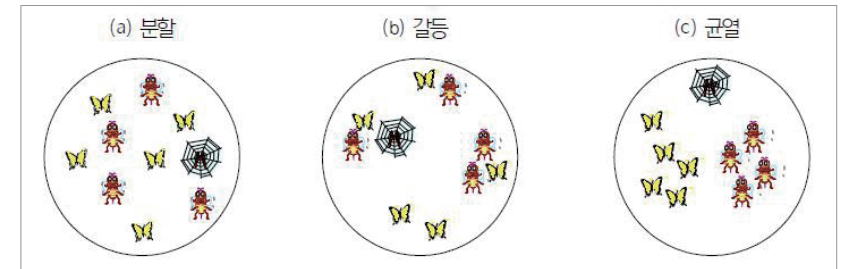
다중격차와 집단적 균열의 구조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불평등의 다원성²에서 생겨난 적대는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해관계부터 서로 다른 삶의 처지, 살아온 경험의 차이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합니다. 경제, 지역, 젠더 등 여러 차원의 사회적 적대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근거에 놓인 원인과 기제를 풀어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갈등 극복과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2 사회 불평등이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고,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강도와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신진욱, 정세은, 장지연(2016), 「다중격차의 사회적 균열 구조와 사회정책적 대응」, 『동향과 전망 NO.97』, pp. 83 참고.

한편 다양한 불평등 차원 중에서 어떤 것은 집단적 균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고용 형태, 자산의 규모, 계급 등 여러 측면에서 덩어리진 균열이 생겨나면서 명시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구조적 격차와 집단적 균열과 갈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굴러가는 사회적 적대의 구조와 역학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균열 개념에서 분할, 갈등, 균열이 3가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에 나온 곤충 그림 예시처럼, ‘분할’은 서로 다른 계층의 개인이 흩어져 있는 것이고,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갈등이며, ‘균열’은 다수의 개인이 집단적으로 모인 범주 간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림 1> 분할, 갈등, 균열의 비교



※ 출처: 신진욱(2017),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NO.32』, pp. 90

어떤 ‘분할’된 차원이나 일시적인 ‘갈등’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개별적 갈등은 집단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사회적 격차,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중격차가 가진 입체적인 결

다양한 차원의 격차, 잠재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분선’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우리’와 ‘적’의 구분, ‘연대’와 ‘대립’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중격차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회 불평등을 이루는 축은 하나가 아니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고소득과 저소득’, ‘자가 보유와 임대 거주’, ‘고자산과 저자산’, ‘고학력과 저학력’, ‘서울과 지방’, ‘남성과 여성’과 같이 대표적인 8가지 축 외에도 다양한 불평등의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2> 대표적인 8가지 불평등의 축



※ 출처: 발표자 제공

각기 불평등의 축이 심화되고 완화되는 구조적 흐름 또한 직선적이지 않고 복잡하며 입체적입니다. 경제적 격차 중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등은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낮고 노후 복지,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주는 충격이 완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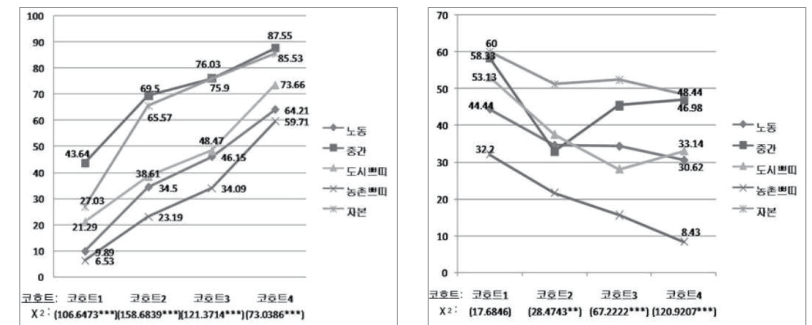
반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고 공공복지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2018년 이후로 평균 기대 수명은 83.3세로 높아졌고³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

3 OECD(2021),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는 평균 연령은 49.3세로 떨어졌습니다.⁴ 자산 기반 생활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 적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집단적 균열이 폭발하는 다중격차의 응축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또 다른 불평등의 축인 교육, 지역 격차 역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1980년대에 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대이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비율이 20%대일 때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져서 학력보다 학벌이 중요해지는 ‘중첩된 교육 계층화’가 발생했고, 교육 계층화의 성격 변화에 따라 지역 격차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진학 여부가 이후 부모와 자식 간의 부의 세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림 3>과 같은 지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왼쪽부터) 부모 계급별 대학 진학률, 부모 계급별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



※ 출처: 문수연(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韓國社會學 50.5』, pp. 152, 156

결국 다양한 차원의 격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중격차 구조에서는 누

4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약자가 될 수 있고, 강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불평등 외에도 타인이 겪은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대하고,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합니다. 뒤엉킨 여러 겹의 적대를 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소인 시민사회에서 노동, 경제, 지역, 젠더 등 다중격차를 함께 풀어가면서 서로 더 깊게 이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중격차를 함께 풀어가는 다중적인 정체성, 연대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우리 시민사회, NPO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신진욱 교수님의 답변

Q. “강연에서 분할, 갈등, 균열 이 3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고, 균열은 ‘집단적 갈등’으로 이해했습니다. 집단적인 변화의 요구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시적인 갈등보다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갈등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조건에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집단적 갈등으로 발전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진욱** | 균열은 갈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시적이며 사회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균열은 집단적일 뿐 아니라 특별히 구조적, 장기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집단적인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 문제를 공감하고,

동류의식을 형성하며, 변화의 목표를 함께 구체화하고, 공동의 경험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다양한 차원의 격차 중 현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적인 사회 불평등이 있을까요?”

A. **신진욱** | 고용, 소득, 주거, 자산, 성별, 교육, 지역 등 여러 핵심 격차 중에서 어느 하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최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자산 불평등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매우 빈번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젠더 이슈를 과거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양극화의 양상이 있을까요? 특히 청년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진욱** | 경제적 양극화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2000년대 내내 여러 면에서 세대 내 양극화가 가장 심한 연령대였습니다. 고령 노동 인구나 빈곤 노인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기도 합니다. 청년층은 특히 2010년대에 세대 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계층과 매우 불안정한 계층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현재 50대인 1960년대생도 세대 내 양극화가 심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폭등을 거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고 자산 빈곤층은 1940~50년대생보다 더 많습니다. 소득 불평등 역시 전체 세대 평균보다 더 심합니다. 현재 30~40대인 1970~80년대가 세대 내 불평등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Q. “강연에서는 주로 NPO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중격차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해외 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신진욱** | 다중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평등과 인권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중격차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차원의 격차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단순히 나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정규직 남성, 소득 빈곤 자산부자 계층, 고소득 임대 생활 계층 등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힘든 측면만 호소하고 다른 측면에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양성평등에는 민감하면서 저학력 남성 단순노무자의 생활고에는 관심이 없다거나, 청년 노동자 남성이 노조 활동에는 열심인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넓은 연대와 공감을 사회적으로 형성해가는 데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2. 문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 최저선이 없다.

황세원 | 일인연구소 대표 /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노동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시도할 수 있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요동치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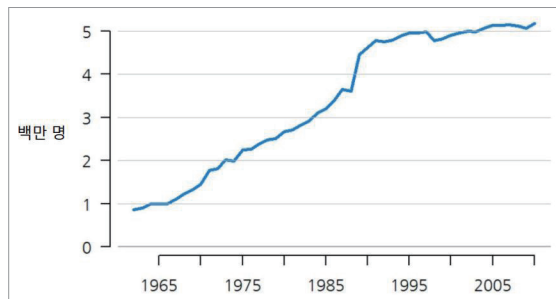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그림 4>를 통해 지금과 다르게 낙관적인 1960년대 사회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방영했던 KBS 드라마 <TV 손자병법>⁵을 보던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가 자라면 최소한 대기업 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환⁶으로 입사하더라도 야간 대학에 다니거나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5 1987년~1993년 방영한 KBS 드라마. 종합상사를 무대로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직장인들의 삶을 코믹하게 다뤘다.

6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간신히 자리를 잡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OECD는 “한국 일자리 중 10%는 기계화 영향으로 사라질 것”⁷이라 예측했고,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고용 보호 사각지대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2억 5,500만 개가 증발했고, 기존의 유망 직업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붕괴했습니다. 집합근무, 장기근속, 평생직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시대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림 4> 경제활동인구



※ 출처: 통계청(2010),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고용·노동·인구-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1주 기준)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지표로 본 서울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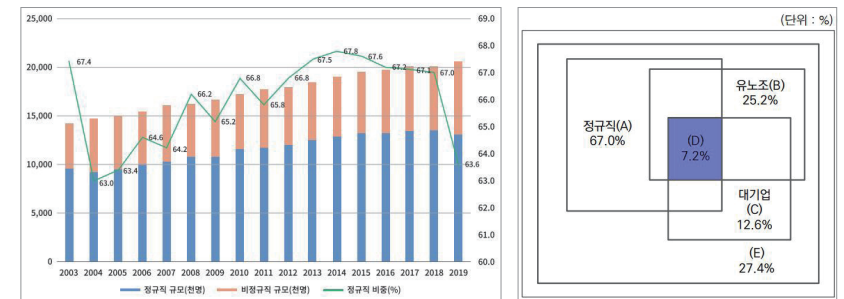
최저선의 보장 : 공정성은 답이 아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희소해지면서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취직시키려면 국회의원, 금융지주 회장 ‘빡’까지 동원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7 KDI-OECD(2021),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청년 세대의 분노는 갈수록 높아졌고 ‘공정성’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공정성’일까요?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줄 서서 위만 바라봐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림 5>의 그래프를 보면 정규직 분포는 67%이지만, 이때의 정규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림 5> (왼쪽부터) 2003~2019년 사이 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및 정규직 비율 추이, 정규직·유노조·대기업의 교집합으로 집계한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괜찮은 일자리’(D)의 비율



※ 출처: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김복순(2019),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129

지속고용 전일제 일자리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7.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소한 정규직 일자리에 줄 서서 들어가기 전에 정규직이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순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한 순서인데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에 장기근속, 평균 이상의 임금, 사내 복지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인 4대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격 등 너무 많은 조건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려고 너도나도 줄을 서는

것도 당연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줄로 선 사람들 중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차별, 저임금, 무시와 하대, 위험한 환경, 긴 노동시간,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등 일자리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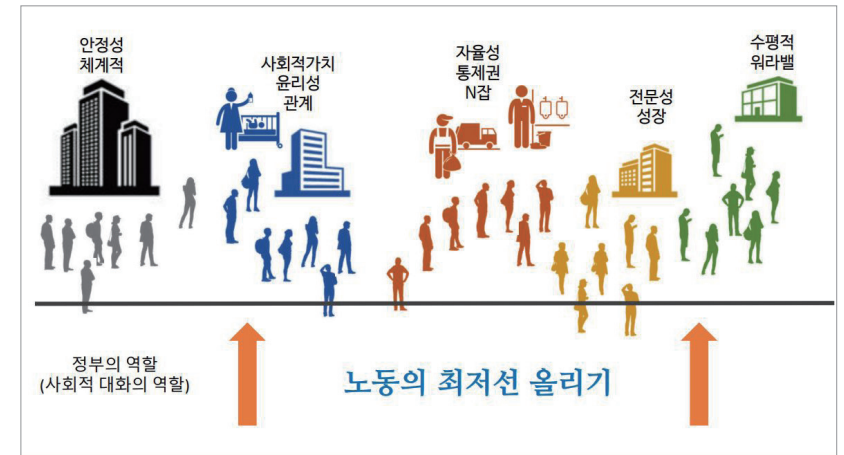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효과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대책은 공무원 시험 준비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팬데믹 상황 역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줄 선 순서대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에만 주목하면 양극화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저선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최저선이 확실해야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선을 확실하게 긋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사회 보장, 노후 대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구도 그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특히 청년 세대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으며, 소득원으로서의 일자리와 사회적 정체성을 분리하는 경

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N잡 등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이 달라져야 하는데, 다행히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6> 노동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사회



※ 출처: 발표자 제공

다양한 일자리의 최저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먼저 사회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전일제, 장기근속 노동자에게만 온전한 혜택이 전달되는 현재의 체계를 넘어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반 사회 안전망 체계가 현재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최저선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처벌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연대 시대의 ‘좋은 일자리’ 상을 버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일하는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황세원 대표님의 답변

Q. “최근 청년들은 직장을 보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게 될 일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현 노동 구조는 여전히 일 중심보다 소속된 조직 중심으로 좌우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황세원** | 조직의 관점은 여전히 “조직의 필요에 따라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금방 적응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내부 변화가 별로 없었던 조직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데, 전통적인 산업의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조직들이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첨예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는 산업 분야의 조직들은 이미 ‘직무’ 중심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근속연수는 짧아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평생직장’에 가까운 큰 조직, 유명한 (전통적인) 대기업, 공공기관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조직들이 직무 중심이 아니라 조직 중심의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정성, 사회적 위세 등을 중시해서 그런 조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조직 중심의 구조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중심, 성장 지향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최근 발전 중인 새로운 산업의 기업, 벤처, 구성원들이 대체로 젊은 조직을 지향할 필요가 있

고, 단기근속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Q. “영리 조직과 비교했을 때, 고용 형태나 임금 격차 등 비영리조직에서 진행되는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황세원** | 비영리조직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재단과 소규모 시민단체 간의 조직 규모, 임금, 근로조건, 근속기간 등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조직 내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조직은 대체로 노동조합과 같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일 수 있는 노사 간 대화 및 협상 기구가 없어서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과 제조업 분야의 임금이 높은 것은 단지 그 산업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업 및 산업 노동조합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단 몇 퍼센트라도 하기 위해 치열하게 줄다리기고 협상하고 투쟁한 결과가 수십 년 누적되면서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영리조직(시민단체)의 임금이 1980년대만 해도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현재 차이가 커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영리조직에서 오랜 시간 일한 직원(활동가)들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대표 및 임원이 되는 것보다 영리 부분에서 성과를 보인 사람이나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입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리더급과 직원(활동가)급의 임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기존의 근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조직 내 근무 방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통제성이 높아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황세원** | 유일한 방법은 노사 간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최대한 자주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의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직원들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임원진도 ‘나는 평생 노동자 편에서 살았다’는 식의 생각으로 ‘사측’ 역할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중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직원은 하는 일(Task)이나 지향성은 ‘활동가’인 동시에 그 조직 안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점에서는 ‘피고용자’이자 ‘노동자’입니다. 비영리조직의 리더 역시 ‘활동가’인 동시에 그 조직에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공통된 지향성을 가지고 함께 일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원에서는 ‘노사 관계’의 자리에 선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 관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그 조직이 본연의 목적과 비전에 맞춰서 발전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의 리더 역시 ‘자본가’가 아니라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대화를 통해 조직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근로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주 대화를 하면서 당장 고치고 싶은 것들(야근하지 않는 방법, 재택근무 기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등)부터 일 년에 하나씩이라도 개선

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조직의 여건이 훨씬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Q. “기존의 대기업 노조, 소위 ‘귀족 노조’라 불리는 기성 노조에 대한 반발로 MZ세대 노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 노조가 파업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수록 하도급과 비정규직이 소외됨에 따라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황세원** | 앞서도 설명했지만, 노동조합에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귀족 노조는 비판했지만, 노조가 필요한 조직들에 대해서 조직률을 현재의 1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공공기관 등 노조들이 정규직 직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이외의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려 할 경우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파업을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합법 파업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사측에 의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므로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만 높이려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떠나 기존의 오래된 노동조합들이 보수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장년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소수자인

청년 세대를 소외시키기는 현상도 보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경직성을 가지기도 하고, 낡은 ‘투쟁’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자신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대교체’ 또는 ‘혁신’의 방향이라기보다 선배 세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나 반발로 읽히는 것은 어느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 이를 악용하는 세력 등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간에 큰 폭의 연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주장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3.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가는 다리

이원재 | LAB2050 대표 /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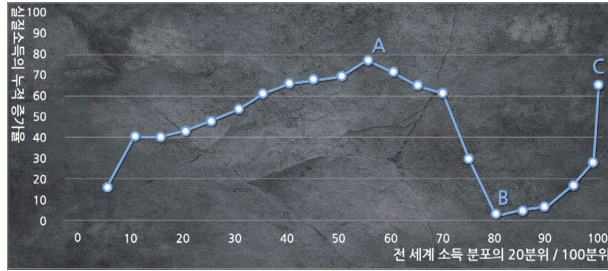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수준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수준이 훨씬 컸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내 삶의 차이보다 나와 내 자식의 삶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사회, 우리는 이런 속도를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그리고 불평등

한국은 기하급수적 분포 곡선의 맨 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40년 사이에 3~4배로 증가했고, 지난 1,800년 동안 성장한 속도보다 최근 3~40년 동안 성장한 속도가 수백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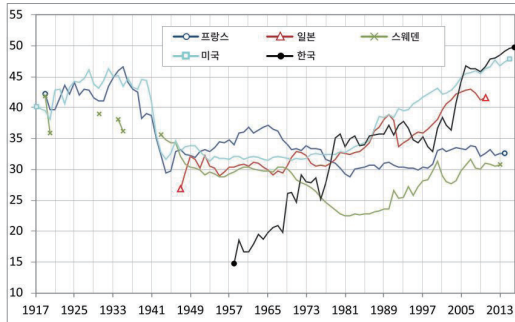
다만 비극인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불평등 속도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1988년부터 20년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 대비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을 비교해보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7> 1988~2008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단위: %)



※ 출처: 라크너와 밀라노비치의 2015년 연구

<그림 8> 상위 10% 집단 소득 비중 국제 비교



※ 출처: 이원재·윤형중·이상민·이승주(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인사이트 2050-09, pp. 5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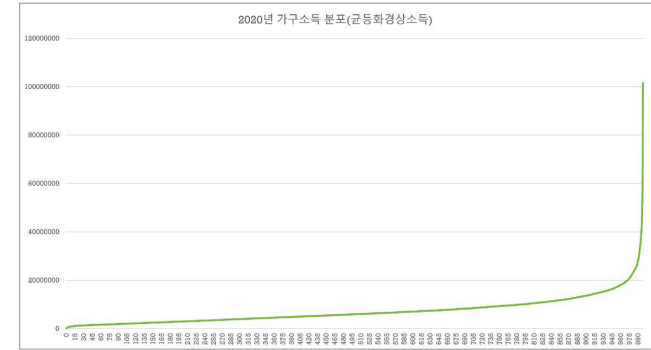
특히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가구소득 분포 그래프와 세계 GDP 성장 그래프 모양이 비슷합니다. 끝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기하급수적 분포, 격차의 모양을 볼 수 있죠. 최근 부동산 자산 분포에 대한 연구⁹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 홍민기(2019),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비중」,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pp. 63-65 참고.

9 이원재·고동현·김민진(2021),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LAB2050, 인사이트 205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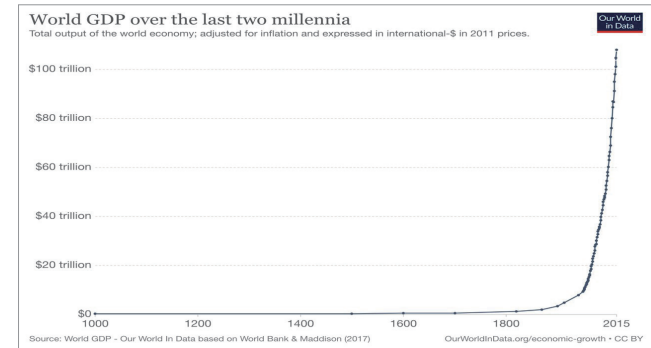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죠. 소득 격차가 누적되면서 자산 격차가 나타나고, 자산 격차는 세습을 통해 축적되면서 심화됩니다. 한국 특유의 학벌 사회는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속도에 더욱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상위 계층은 고학력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자산 격차는 순환 및 확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9> 2020년 가구소득 분포(균등화경상소득)



※ 출처: 통계청(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0> World GDP over the last two millennia



※ 출처: World GDP - Our World in Data Based On World Bank & Maddison(2017), ©Our World in Data

경제 실험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묻다

이런 현상은 과연 소위 나쁜 사람들의 독점과 착취가 누적되면서 구조적 격차가 벌어지는 ‘공정성의 문제’ 때문일까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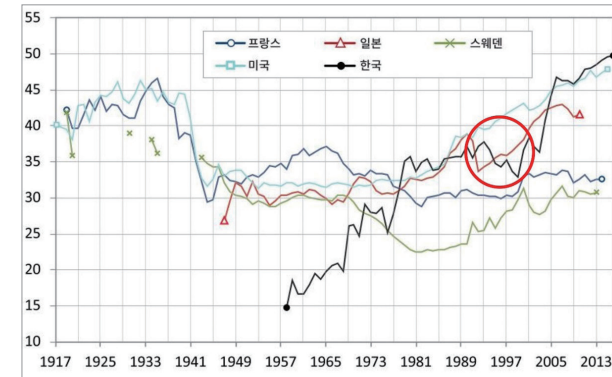
5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참여자는 100만 원씩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일 무작위로 다른 1명에게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고가 0이 되면 더는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1만 원을 주고 나도 1만 원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는 ‘100% 가위바위보 운’으로 결정되는 경제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흥미롭게도 우리 현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은 사람이 줄어들고 돈이 적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위 1%와 나머지 99%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기하급수적인 불평등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월렌스키가 발견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험이 현실이라면 비도덕적으로 불공정한 문제는 바로잡되,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평등 확대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확대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연 가능한가?’, 두 번째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먼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1>에서 한국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 그래프를 보면 1987~1997년까지 10년간 내려가는 구간이 보입니다.

1987년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시민의 힘과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을 바꿨고, 노동운동이 생겼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생겼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고 진전이 생겼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 11> 상위 10% 집단 소득 비중 국제 비교(한국 1987~1997 구간 표시)¹⁰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실험에서 기본소득제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다면 소득 분포 결과는 기하급수적인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의 형태가 됩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괜찮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국 시민의 힘에서 온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지금보다 괜찮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NPO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GDP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종류의 성장, ‘참성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한 줄로 서서 바라보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줄로 서야 합니다. 경

¹⁰ 출처는 이원재·윤형중·이상민·이승주(2019), pp. 5.

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의 기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 힘은 과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듯이 시민의 힘에서 나옵니다. 당장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지표를 보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서 희망을 본 것처럼,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이원재 대표님의 답변

Q. “LAB2050에서 GDP 대안으로 ‘참성장지표’를 개발 및 발표하셨는데요. GPI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지표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원재** | 참성장지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의 가치, 인적자본의 가치, 일과 여가의 가치, 디지털 가치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발전지표입니다. 기존에 연구되던 GPI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 맞춰 세부 지표와 데이터를 보완해 개발한 지표입니다.

양적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가정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 불평등,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DP를 보완하는 지표를 거시사회발전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성장지표를 연구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과 지구 환경과 여가의 가치와 사람 및 디지털의 가치를 양적 경제성장만큼 중요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Q.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진보/보수 진영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증세 찬반 등 조금씩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원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유의미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중요 요건은 무엇일까요? 중요 요건이 일부 고려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실험을 지속해나가는 게 더 유의미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A. **이원재** | 기본소득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입니다. 조건 없이 보장된 생계 수단만이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며, 이런 실질적 자유야말로 기본소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오랜 시간 동안 완성되어야 할 제도이므로 불충분하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요건은 처음부터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위원의 분석¹¹에 따르면, 기본소득보다 차등 복지를 제공하는 ‘부의 소득세’가 불평등 완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이원재** | 기본소득제와 다른 공적부조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 등 선별급여의 경우 완벽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 방법의 현실성을 확인한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부의 소득세 등의 선별급여는 지급하려는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11 김다혜(2021.10.28), “보편적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상대적 떨어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016000002>(검색일: 2021.10.28).

해결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돌봄 양극화, 디지털화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 계층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강연에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지, 혹은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 **이원재**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이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단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별도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높이며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4. 일극 중심 사회에서 지역 공생 사회로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일극 중심 사회’는 서울 중심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강연에서 일극 중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공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어있는 집과 사라진 학교들

일극 중심이 낳은 모습 중 하나는 농촌 인구 문제입니다. <표 1>을 보면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96%인 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충청 남도는 113.3%로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서울, 충남, 전남, 경북의 주택보급률

구분	전국	서울	충남	전남	경북	
2019	가구 수	20,343.2	3,896.4	864.1	741.0	1,102.9
	주택 수	21,310.1	3,738.6	978.7	842.1	1,293.3
	보급률(%)	104.8	96.0	113.3	113.6	117.3

※ 출처: 통계청(2019), 「주택보급률」

충남 홍성군의 군 전체 주택보급률은 110.4%인데, 도시화되지 않은 면 지역(홍동면 119.7%, 금마면 119.4%, 장곡면 118.7%)은 120% 가까이 됩니다.¹² 전국에 151만 채의 빈집이 있는데, 202만 가구가 사는 면 지역은 전체 주택 210만 채 중 빈집이 31만 7천 채로, 빈집 비율이 15%입니다.¹³ 결국 한국 국토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면 지역 중 30만 채 이상이 빈집인 상태로, 농촌 지역에 집은 있어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폐교입니다. 우리나라 시·도 중 가장 많이 폐교된 지역은 전라남도, 폐교된 학교 수는 총 833개¹⁴이고 도시가 아니라 주로 농촌 면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학교가 모자라서 새로 짓는 반면, 농촌 지역은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 및 폐교 문제는 통계 자료를 보는 것보다 농촌에 직접 가보면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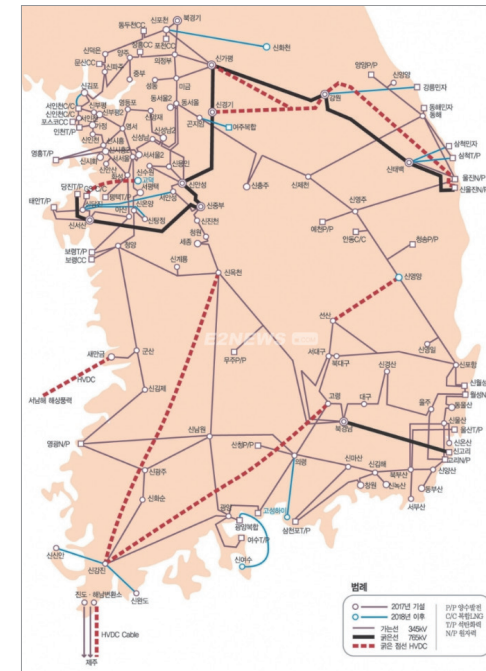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역행하는 현주소

일극 중심 사회가 낳은 문제를 농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논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양극의 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울과 농촌이 아닌 서울과 부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역 분산 논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국토 면적 73%에 달하는 전국 1,182개 면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5,178만 명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¹⁵ 서울시 강남구 인구가 56만 명인데 강남구보

12 e-나라지표(2020), 「2020 홍성통계연보」.
 13 통계청(2020), 「주택총조사」.
 14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1), 「사·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15 전국 1,182개 면의 인구는 총 467만 8천 명.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참고.

다 면적이 3배¹⁶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의 인구는 2,4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 사회가 농촌 인구의 유출 및 감소를 낳았고, 결국 대한민국 내에 심각한 인구 밀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 12>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 출처: 이투뉴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시대에 이런 방식의 일극 중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현재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바닷가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송전선에 의지해서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16 서울시 강남구 면적 39.5km²,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면적 146.7km².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앙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송전선이 끊어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석훈 박사의 소설 <당인리 발전소>¹⁷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이 블랙아웃되면서 ‘공멸’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껏 논의된 균형발전론은 서울 닦기에만 급급했고,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중앙의 자원을 가져오는 것에 매몰되었고 농촌을 소외시키는 또 다른 불균형개발론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산과 울산은 도시이지만, 경남은 광범위한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해도 경남의 서부 농촌 지역과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역 공생 사회로 이끄는 길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공생 사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일극 중심 사회를 낳은 중앙집권적 정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연방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부울경을 연방주로 만들고 권한과 재정을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17 전라남도 나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블랙아웃된다는 내용.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과제는 ‘읍면 자치’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1961년 이전의 지방자치는 읍면 단위로, 읍장, 면장, 읍의회, 면의회를 주민 직선으로 구성했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로 읍면 자치가 말살됐고 현재의 군 단위 행정구역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았던 읍면 자치가 부활해야 농촌 주민들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는 에너지 자립 마을 중 하나인 독일 쇠나우(Schoenau im Schwarzwald) 마을도 인구 4천 명 정도로 구성된 읍면 정도의 작은 지역입니다. 한국과 달리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표 2>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15개 지자체

No	시도	구군	삶의 만족도
203	경상북도	고령군	1.0000
174	전라남도	보성군	0.9990
206	경상북도	예천군	0.9988
202	경상북도	청도군	0.9963
218	경상남도	의령군	0.9962
158	전라북도	진안군	0.9947
160	전라북도	장수군	0.9946
142	충청남도	계룡시	0.9917
146	충청남도	서천군	0.9854
59	인천광역시	옹진군	0.9803
181	전라남도	함평군	0.9695
121	강원도	양구군	0.9673
157	전라북도	완주군	0.9652
225	경상남도	함양군	0.9565

※ 출처: 국회 미래연구원(2021), 대한민국 행복지도

마지막으로 여전히 서울을 선호하고,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는 한국 사회에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표 2>를 보면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15개 지자체가 충청남도 계룡시를 제외하고 모두 군 단위입니다. 서울에서 살기를 선호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 주입된 ‘서울 선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역 공생 사회를 위해 NPO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우리부터 서울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야마시타 유스케 작가의 책 <지방회생>에 나온 글을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도과 도시로의 과잉 집중은 사회관계의 풍부함을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도시화에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서열의 역전’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된 서울 중심의 서열 구조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장애 요인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하승수 대표님의 답변

Q.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결국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결의 맥이 끊긴 경북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는 혼자 중앙의 연결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끊어진 지역 간의 연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활동가 영역에 대입해서 조언해주시 수 있을까요?”

A. **하승수** | 결국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연결될 때 힘이 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 또는 서울과 연결해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던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역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하승수** | 지금 흔히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계속 순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의미의 지역화폐는 작은 지역 단위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에서는 홍동면을 중심으로 ‘앞’이라는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권처럼 계속 유통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도 정부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Q.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중심으로 중앙집중화되는 메가시티론처럼 특례시 지정이 과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지 궁금합니다.”

A. **하승수** | 특례시 지정은 단편적으로 특례시에 한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편적

인 접근법보다는 근본적인 자치·분권 개혁을 해야 합니다.

Q. “지역사회와 접점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은 지역 양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귀농·귀촌하는 형태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하승수** |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양극화라는 용어보다는 일극 중심(서울 중심)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극화는 결과이고, 원인은 일극 중심(서울 중심)에 있으니까요.

일극 중심 사회가 된 것은 제도와 구조의 탓도 크지만,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 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서울 중심의 서열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과 삶을 접하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사람, 공간 등 지역사회와의 접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패널 Talk. 사회 양극화를 좁히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 노동, 경제, 지역 3가지 분야¹⁸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7:25~17:55

참여 연사

황세원 | 일인연구소 대표

이원재 | LAB2050 대표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참여 패널

김창수 |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김양희(치자) |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정택수 | 경실련 정책국 부장

고정근 | 연구활동가

강남규 |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노동] 진정성 있는 을의 연대, 노동의 최저선을 위해서

김창수 | ‘우동(우리동네노동권찾기)’은 동대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노동조합이 지역과 잘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노동권 교육을 통해 노동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게 무엇보다

18 포럼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된 질의응답을 노동, 경제, 지역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재구성했습니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직접 배달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배달노동자 내에서도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한 전업 라이더와 도·자·킵(도보·자전거·킵보드)을 이동 수단으로 한 겸업 라이더 사이에서 배달 건수 경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또 최근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의 노조 간 가입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필수 노동자’ 직군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들의 노조 조직이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에 앞서, 어떻게 하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자들 간의 ‘을의 연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세원 |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비슷한 일일지라도 이해관계가 무척 달라졌고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노조 조직물은 정체됐지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많아진 것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 활동을 비롯해서 청년유니온, 라이더유니온 등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많아졌는데요. 꼭 전통적인 노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노조의 형태로 조직해서 내는 목소리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전문성은 기존 조직들에 있으므로 ‘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통해서도 제도를 바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뉘으로써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과 신뢰가 생기고 그다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는 활동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치자) | 황세원 대표님의 ‘노동에 최저선이 필요하다’는 강연을 듣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최저선으로 성평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조사¹⁹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여성은 남성보다 34.1% 정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가 과연 정당한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평등한 문화가 없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성들은 많이 경험해봤을 테고요. 노동의 최저선에도 성평등한 문화, 성평등한 일자리를 넣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세원 |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저선을 이야기하면 보통 최저임금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도 인권, 안전 보장 등 우리가 일하는 세세한 조건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2020년 8월에 했던 연구²⁰에서 한 여성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안정성의 정확한 의미를 물어봤더니 “제 입장에서 성차별 없는 직장이 안정성 있는 직장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 응답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경력 단절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성이 오래 일할 수 없는 ‘성차별 있는 직장’은 안정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조건을 쫓아보면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공무원 시험만 보는데, 그게 정말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직장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처럼요. 여성을 비롯한 청년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을 적극적으로 듣고 세세하게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19 OECD(2021),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

20 황세원(2021), 「구직자에게 월급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을까? 랩 실험을 통한 청년 세대 일자리 지향 탐색 연구」, LAB2050, 인사이트 2050-07.

2. [경제] 참된 성장, 다양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삶

정택수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값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30평형 서울 아파트 시가가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1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2021년 5월 기준).²¹ 2011년 초에 노동자들이 평균 18년 치 임금을 꼬박 모아서 30평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 2021년에는 33년 치 임금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집값 폭등 문제로 인해 민원 전화로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하는 사연자가 많습니다. 일례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강남 아파트를 팔고 부천으로 이사 간 분이 있는데 집을 팔자마자 10억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한편 원정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며 ‘아파트 사재기’하는 투기 양상은 더욱 성행하고 있죠.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원재 |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으로 이사 간 사연자는 집값에 변동이 없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재산의 문제’와 ‘집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비용을 지불한 재산이지만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죠. 하지만 집은 우

리가 살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불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게 정책 당국자들의 큰 실책이자 현 정부의 실책, 우리 모두의 실책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없더라도, 주어진 삶과 서비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되는 감정은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임금을 10년 치 모으면 살 수 있었던 집을 2~30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엉켜 있으며, 대안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유세를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임대주택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경실련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도 공공기관의 불로소득 자체를 지적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개발과정에서 얻은 불로소득을 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풀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근 | 강연 발표를 쪽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한편, 갑갑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육아를 통해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까지 키웠는데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대안적인 삶의 형태가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 줄 서기’식 경쟁 사회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고, 부모의 선택과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조 강연에서 신진욱 교수님이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환이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불일치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듭니다. 하승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지역

21 경실련 부동산실거래액본부(2021),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pp. 2.

공생 사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인해 주말부부, 지방-서울 출퇴근 형태가 생겨난 것도 사람들의 욕망이 현실적 조건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현실 세계 속 욕망과 불일치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전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에서 우리의 필요 조건, 충족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원재 | 예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해탈하고 싶습니다.”라고 묻자 스님이 “해탈하고 싶다는 욕망을 버려라.”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고정근 활동가님의 질문도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고 싶고 대안적 삶도 살고 싶은 마음 모두 욕망입니다.

다만 다양한 욕망을 방해하는 제도가 문제이기에 제도적 해법을 논하는 것입니다. 주거 보장 역시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과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적 해법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대안적 삶의 형태를 위해 끊임없이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사회적 경제 등이 촉발된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에너지를 조직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치자) |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는 저렴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 착취할 수 있었던 식량, 환경부터 여성의 돌봄노동 등 여러 종류일 텐데요.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값어치 있게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성장이 아닌 ‘성숙’ 내지는 ‘탈성장’이라 불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리고 살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입니다.

이원재 | 성장과 성숙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 고민과 맞닿아 있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성숙’이라는 말 대신에 ‘참성장’이라는 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살고자 하는 욕망도 인간의 다양한 욕망 중 하나이며 확장된 의미의 ‘성장’임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성장 중에서 근시일 내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돌봄에 대한 질을 높이거나 돌봄의 사회화, 돌봄 평등 등 성평등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역] 지역 공생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가?

강남규 | 지역 문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청년에 속한 사람으로서 청년 문제와 연관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역에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와 다르게 다양해졌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테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한 도시로 묶는 ‘메가시티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 공생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로 실현 가능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승수 | 메가시티론의 단점은 정치·행정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사회 및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서울바라기’처럼 서울의 뭔가를 따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농촌은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강남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생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하고, 농촌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를 임금, 인권 등 괜찮은 조건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역시 큰돈을 벌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본주택이 농촌에 공급된다면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괜찮은 삶을 보장하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농촌에 마련되면, 청년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공생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근 | 지역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질문 내지는 우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에너지, 먹거리, 폐기물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서울 중심 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승수 대표님께서 서울과 그 외 지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승수 |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서울의

자립률을 높여야 합니다. 비록 서울의 100%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나 서울 곳곳의 공터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게 지역 공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베를린,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들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볼 생각조차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양희(치자) |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유입,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농촌에 내려가서 사는 것도 다른 환경과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 귀농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처럼 따뜻한 시골살이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가 빠지면 영화 <이끼>와 같은 스릴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뭔가’를 캐치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승수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여민회도 2019년에 3개 마을을 성평등마을로 지정하고 규약 표준안을 마련한 뒤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 규약은 농촌 지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다시 정비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마을 규약을 세워서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문화의 변화도 필요한데,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은 농촌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을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이전보다 성차별적 요인과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과학적·윤리적 이해

한재각 |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그림 13> 9월 26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프루탈시를 덮친 거대 모래폭풍



※ 출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그림 13>은 기후위기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모래

폭풍 '하부브'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폭풍을 목격한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사막 지역에서나 볼 것 같은 모래폭풍이 브라질을 덮친 것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심각한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바짝 마르고 열대우림이 잘려 나가 맨살이 드러난 땅을 거쳐 온 거센 바람이 모래폭풍을 만든 것입니다. 세계 최대 담수 습지였던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는 바짝 말라서 화재가 연속으로 발생했고, 총수면 면적의 74%가 감소했습니다. 물이 마르고 저수지가 사막이 되면서 호수의 최후의 웅덩이를 찾아왔던 물고기들 역시 폐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미래를 연상케 했는데요.

기후위기의 현재, 그리고 불평등

과연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스웨덴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연설에서 8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6년 반밖에 남지 않았죠. 이는 2018년 발간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입각한 계산으로, 탄소 예산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C 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의미합니다. 매해 42기가톤(Gt)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약 420기가톤(Gt)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1.5°C 목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6년 반 안에 모든 탄소 예산이 바닥나고, 지구 평균 온도가 1.5°C를 넘어설 가능성이 2/3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전환을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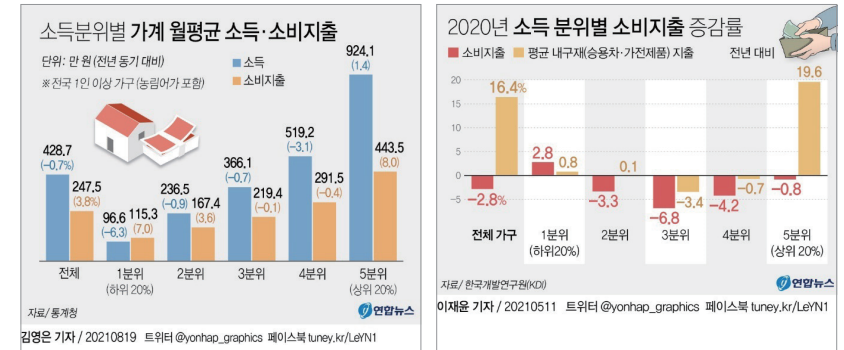
야 합니다. 그래야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매해 2030년까지 7.6%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본 역사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겪었던 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종의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온실가스가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획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새로운 도전 방법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며, 온실가스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입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분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을 때, 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비 기반 배출량의 대략 50%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 세계 소득의 52%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위 50% 소득계층이 가져간 소득은 8%를 차지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1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득 불평등이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후 부정의(Climate Injustice)'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는 없으나, 소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짐작 가능합니다. 많이 소비할수록 당연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14>에서 최근 통계 조사를 보면, 한국도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림 14> (왼쪽부터) 소득 분위별 가계 월평균 소득·소비지출, 2020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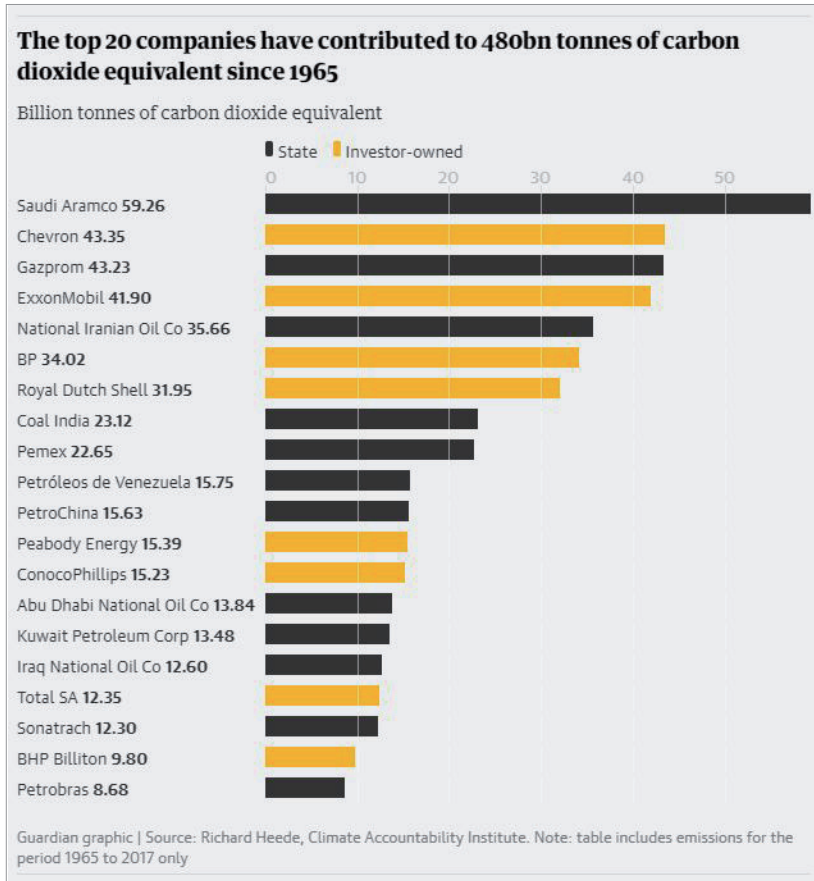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21),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2021),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연합뉴스

또한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에 모든 계층의 소비가 줄었지만, 한국 상위 20% 소득계층만 평균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비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을 것입니다. 재난 시기에도 부자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 이제는 넘어서야 할 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실용적 불가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미뤄왔던 방법을 모두 시도하는 '유토피아적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정치적 결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림 15>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개 기업
(1965~2017년까지의 배출량만 포함)



※ 출처: Richard Heede(2017), 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The Guardian

<그림 15>는 특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을 보여줍니다.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공급해서 돈을 벌고 있는 Saudi Aramco, ExxonMobil, BP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1965년 이래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의 35%에 이 기업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100개라면, 그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온실가스는 8~9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팔아서 돈을 벌도록 내버려 둔다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요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신규 개발 금지, 기존 생산의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운동입니다. 1992년도 유엔기후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화석연료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국제조약을 세우고 거기면 처벌하는 운동을 벌여야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사라고 말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정말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중심의 빠른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 예컨대 '15분 도시'와 같은 구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 정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후에 본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거빈곤층이 실제로 되돌아와서 살 수 있는 주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쉽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인 해결책인 거죠. 온실가스 해결책은 이러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하거나 '지금껏 존재한 적 없는' 것을 추구하자고 말

하고 싶습니다. 이미 비현실적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 총 3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녹색 성장과 그린뉴딜의 개념도 혼재되어 있고,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아닌 삶, 성장이 없는 사회인 ‘탈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화석연료 생산, 군수산업 등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 복지, 교육, 돌봄노동과 같은 부문들을 육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필수 노동으로 입증된 돌봄노동과 같은 직종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가치를 덜어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 맡기고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상호 간의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내는 탈성장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요약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몇 가지 토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용적 불가능주의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거버넌스에 계속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탄중위 해체공대위에서 탄소중립위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내놓은 엉뚱한 결과물

에 맞서 투쟁했는데요. 이제는 권력 내의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동맹을 구축하고,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를 복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운동의 힘으로 지금의 체제를 흔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술 경제적 접근, 즉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전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이야기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 조약과 같이, 누구를 패배시키고 무엇을 폐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분노하고, 벽살을 잡는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용하고 멋진 얘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한재각 연구활동가님의 답변

Q.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46%가 기후위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답했는데요.²² 시민 다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한재각** | 이미 꽤 많은 한국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강의에서 만난 시민들도 “요즘 날씨가 이상해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로 많은 기후재난

22 Jon Henley(2021.11.7), “Few willing to change lifestyle to save the planet, climate survey finds”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nov/07/few-willing-to-change-lifestyle-climate-survey>(검색일: 2021.11.12).

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기후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생겼다고 모든 시민이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입니다. 내 행동 변화가 과연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판단해봤을 때, 오히려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은 비교적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의 변화는 개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동참하고 싶지만 자기 집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정치 행동에 제약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넓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론, 교육, 예술, 인터넷 등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민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다양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Q.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개인의 '작은 실천'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한재각** |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많은 '개인들'의 관심과 결의가 없으면 도전조차 하기 힘들겠지요. 기후위기를 느끼고 걱정하는 개개

인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에서 기후정의운동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일상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텀블러와 에코백을 이용해서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은 찾아보면 너무 많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의 작은 실천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연결하려는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와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2명 이상의 주변 친구, 이웃, 동료와 함께 정기 모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기후위기에 필요한 '중요한 실천'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의 걱정과 관심, 개인적인 작은 실천이 사회적인 힘을 가진 운동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Q. “청소년기후행동이 시민의회 제안 등 지속적으로 의회정치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한재각** | 청소년기후행동의 시민의회 제안은 '현재의 제도적 절차로는 절박하고 다급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좌절과 비판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의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작동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기후행동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제안한 ‘기후시민의회’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구성 및 운영되는 ‘기후시민의회’²³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기존의 정치체제가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일종의 대안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시민의회’만으로 작동되지 않는 기후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볼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기존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둔 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을 모아서 기후위기 해결책을 토론했고 의견을 제시해보자는 일회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체제의 한계를 보완한 기획이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적인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기존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녹색연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느끼는 정치권의 기후위기 인식도는 낮은 편이었는데요. 한재각 활동가님께서도 국내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아쉬움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한재각 | 국내 정치인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다고**

23 영국의 기후의회(CAUK)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CC).

생각합니다. 설사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대응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5개월 후에 ‘동일한’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또한 높은 지지율로 통과시킨 것에서 드러납니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부산시민들의 개발 요구에 맞추고 표를 얻기 위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대통령까지 가덕도 현지를 방문하고 국토부 장관의 부정적인 입장까지 억지로 돌려세웠죠.

당장의 선거정치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항공교통을 더 촉발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정치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환경과 기후문제에 가장 이해가 높다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는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강력해지면 그들은 기후정치 앞에서 똑똑해지지만, 운동이 느슨해지면 다시 멍청해집니다. 다른 말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정치인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정권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게 만들어야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으로 약속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Q. “많은 대기업,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들이 가져간 부’를 ‘그들이 초래한 기후위기’ 극복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환수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A. **한재각** |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대기업,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죠. 그러나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생긴 기후위기의 피해와 그 희생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 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만들면서 기후위기 피해를 야기한 기업들이 기후위기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률을 만들고,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의 긴급한 요구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지난 10월 4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무주택자, 세입자분들이 시청에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용산정비청 부지를 점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때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소수의 부동산 권력이 독점하는 문제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비리 문제를 고발할 게 아니라 주택공급과 함께 반복됐던 개발이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집 갖기’ 경쟁에서 마지막으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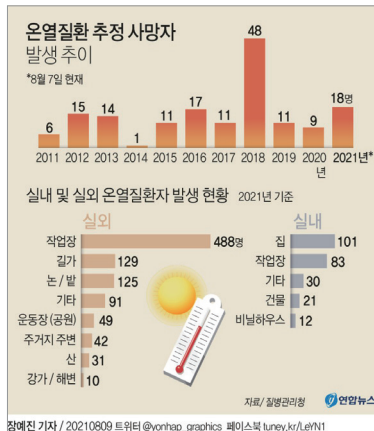
재난과 기후위기의 시대, 주거빈곤의 상황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강해지는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중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

빈곤층이 겪는 실제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연의 사례들은 최예륜 선생님의 연구보고서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에서 가져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빈곤층의 첫 번째 사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그 집에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안전수칙도 ‘최대한 집에서 머물라’는 자가격리 지침이었습니다. 여름 혹은 겨울 혹서기에 받는 재난문자도 ‘최대한 집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집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안전수칙은 주거빈곤층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고시원인데, 단지 고시원 건물 밖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안전이 보장될까요? 밖을 나가지 않으면 당장 생업 활동이 어려운 데다가, 안에 있더라도 타인과의 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십 명이 하나의 화장실, 공동 부엌을 사용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침을 이행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림 16> (위부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추이,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2021),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2021) 현황」, ©연합뉴스

이렇듯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조는 이전부터 존재했죠. <그림 16>에서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실내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입니다.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지침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2년 전의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화재로 사망했던 7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3명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개선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열악한 집에 머무를 수 없어서 집 밖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집 밖을 전전한다 해도 대안은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공공시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공용시설 휴관, 서울역 의자를 폐쇄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공공공간이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는 ‘거리 홈리스’입니다.

최근 뉴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머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밥새 불도 켜져 있고, CCTV도 있기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이 밤에 머무르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가출 청소년이 24시간 무인 편의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서울역과 같은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과연 무인 편의점을 찾았을까요? 어쩌면 가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무인 편의점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리의 효과나 방도가 없는 집들의 상황입니다. <그림 17>은 2018년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 시공을 진행한 쪽방의 사진입니다.

<그림 17> 오현웅 님의 방²⁴



쪽방에 살고 있는 오현웅 님에게 창호와 두 쪽 벽면을 단열 시공한 효과를 묻자, 가장 먼저 “벽 두께 때문에 방이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벽 두께가 사방으로 8cm씩 두꺼워지면서 두 평 가까이 되는 쪽방의 넓이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열 효과는 높아져서 겨울철 추위는 덜하지

24 최예륜(2020), pp. 25.

만, 여름철 더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체온을 비교해 보니 1도가량 올라가 있었죠.

만약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자라면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사업과 같은 지원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하거나 그해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다는 사유로 희망 신청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거환경의 수리 효과나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열악한 집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사례는 광열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집에 전열기구나 에어컨 등이 있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집이 옥탑이라면 보일러를 틀어도 겨울철 외풍이 너무 심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에너지 바우처’가 있지만, 지원 대상을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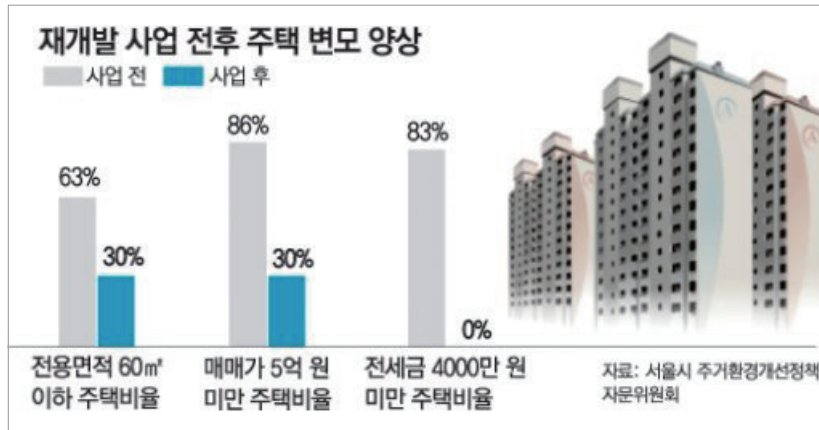
우리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해결할 방도를 제대로 논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저는 기후위기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겹치면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문제인지, 집이 문제인지, 아니면 가난 그 자체가 문제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위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의 물꼬도 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집

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본래 도시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목표는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18>에서 ‘재개발 사업 전후 주택 변모 양상’을 보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 비율은 63%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림 18> 재개발 사업 전후 주택 변모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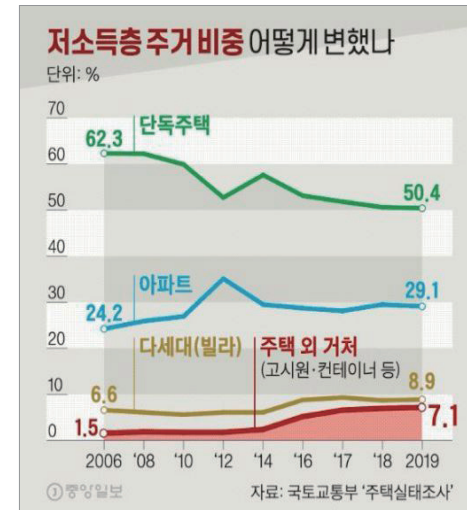
※ 출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20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매매가 5억 원 미만 주택 비율은 86%에서 30%로, 전세금 4,000만 원 미만 주택 비율은 83%에서 0%가 되었죠. 다시 말해 재개발이 끝나면 4,000만 원의 전셋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이윤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건설은 그 주택을 소유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주택정책에서 건설은 성공했지만 분배에 실패한 결과가 바로 ‘주택 품질의 양극화’입니다. <그림 19>에서 저소득층 주거 비중을 보면 단

독주택이 줄어들었고, 아파트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거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사라진 것이죠.

<그림 19> 저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 출처: 국토교통부(2019), 「주거실태조사」, ©중앙일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때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재개발을 위해 쪽방·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가 모두 철거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개인을 넘어서 ‘기후위기 주체’로서 연대하기

우리는 승자 독식의 부동산 사회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고민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책 <기후정의선언 2021>을 보면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기후위기가 약자에게 더 위험할 것이라든가 결과론에만 치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간과해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²⁵ 결국 기후위기의 원인인 ‘불평등’, 불평등의 원인인 ‘사회구조’에서 출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동자동 쪽방촌에 만들어졌던 돌다릿골 빨래터입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공용 빨래터를 설치했죠. 그런데 돌다릿골 빨래터의 세탁기는 얼마 되지 않아 운영을 멈췄습니다. 노후한 쪽방 건물에 설치된 대형 세탁기가 작동할 때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쪽방은 그대로 두고 1층에 빨래터만 리모델링한 결과였죠.

저는 이 돌다릿골 빨래터야말로 ‘근시안적인 대안으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며,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에 시민들의 ‘진짜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노점상에게 단순히 플라스틱 줄이기를 강조하기보다 봄·가을이면 장사할 맛이 났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지를 질문하고 구조적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봄·가을이 길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봄·가을이 짧아졌고 장사가 잘되는 기간이 줄어든 것처럼 ‘누구나 기

25 기후정의포럼(2021), 『기후정의선언 2021 - 기후 정의 체제 전환』, 한티재, pp. 27.

후위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내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로서 그 언어를 찾고 이 사회에 개인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껏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개인적 실천’을 꼽았다면, 이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함께 요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더불어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빈곤층도 기후위기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장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실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김윤영 활동가님의 답변

Q. “국일고시원 사건은 이후에 고시원장만 처벌받았을 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적정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A. **김윤영** | 비주택 거주민의 상황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될 리는 만무합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주거권’을 중심에 둔 대안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거처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그곳에서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좋은 공공의 대안이 존재해 열악한 거처로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되면서 백신 패스 혜택이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질 예정인데요. 백신을 맞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백신 미접종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자기 증명 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을 불러온 것처럼, 현 시국과 관련하여 또 다른 차별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김윤영** |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이용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이었습니다. 홈리스도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이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은 상황인데요, 백신을 맞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거나 ‘정보 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시설의 1차 접종률은 87%였으나 거리 홈리스의 경우 29%에 불과했습니다.

미접종한 이들의 사유는 단연 ‘집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43%는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가 어려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도 결국 ‘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Q.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주거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을까요?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김윤영** | 현재 정부의 긴급주거대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나 탈가정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집합시설이 바이러스 시대에 무력하다는 것을 고려해 개별적 공간을 긴급주거대책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탈시설운동’이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월세 체납자나 거리 홈리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6개월 이상 거리에서 생활한 이들을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이들이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집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탄소중립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떠안기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데요. 전환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 **김윤영** | 무엇보다 염려해야 할 것은 위기 앞에서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의 압력입니다. 약자의 생명과 존엄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기 위한 당면 과제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누구나 쉴 곳이 있는 주거권을 비롯해 모든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역할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이루기 힘든 일이겠지요.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 준비된 사회 안전망이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운 만큼,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Q. “시민사회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정부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김윤영** | 집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한국 사

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미래의 노후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집을 소유해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방향을 잡고, 이윤을 중심으로 굴러온 주거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에 첫 번째로 요구할 사항은 공공주택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주택시장 중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자나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첫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3. 폭풍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농민

김정열 | 비아캠페시나 동남동아시아 대표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비아캠페시나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1993년 설립된 국제농민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81개국 182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04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농민으로서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후위기의 폭풍을 맞은 농민들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을 더위', '가을 한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1년 10월, 영상 30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18~19일, 양일에 걸쳐 영하 1도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한국에서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가 내렸고, 모든 작물이 얼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뉴스에 나온 양상추 품귀 현상입니다.²⁶ 양상추는 날씨와 기온에 취약한데 이상 한파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주로 강원도 횡성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거나 정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상추의 작황이 우리의 식탁과 연결되는 지점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양상추 농가의 미래를 짐작하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친 농가는 과연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림 20> (왼쪽부터) 2021년 10월 17일, 10월 19일의 생강밭 모습



※ 출처: 발표자 제공

<그림 20>의 왼쪽 사진은 제 생강밭입니다. 10월 17일에 타 단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농생태학을 참고할 겸 밭을 보러 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비교하기 쉬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19일의 밭 모습입니다. 이상 한파 때문에 서리가 내려서 생강이 전부 말라버린 거죠.

26 홍다영(2021.11.03),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네... 이상 한파에 공급난으로 값 폭등",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1/11/03/UOVFB2F5XRGXJGNTLPCUZL457/>(검색일: 2021.11.12).

<그림 21> '깨씨무늬병'에 걸린 벼와 정상적인 벼의 모습



※ 출처: 발표자 제공

올해 기후는 특히 고온다습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비가 계속 내리면서 병충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제가 키우는 논은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주변 지인인 제천 농민의 논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림 21>을 보면 왼쪽이 '깨씨무늬병'²⁷에 걸린 벼이고, 오른쪽이 정상적인 벼입니다.

고온다습으로 인해 '배추 무름병'이 확산되면서 배추 농사도 피해를 입었

27 식물의 잎에 병원균의 감염으로 갈색 반점이 형성되는 병.

습니다. 올해 다들 김장을 준비하실 텐데, 김장철 배추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저 또한 농사지은 지 30년 만에 김장 배추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니깐요. 더구나 배추 무름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올해는 폐농하고 내년을 기약한다고 해도 토양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으면 내년에도 배추를 심지 못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 식량위기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1%이고, 식량수입량은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식량지수는 10여 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재난으로 인해 가뭄이 심화되면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겼고, 이 식량위기는 결국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을배추를 100% 폐기해도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관련된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1/10도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를 위해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서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기후위기를 야기하는데 농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봐야 할 것은 모든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데요. 이 먹거리 부문의 배출량은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농업의 전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이때의 농업 생산은 결국 대규모 생산,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에 의한 생산입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Bayer-Monsanto(바이엘-몬산토), Cargill(카길), Nestlé(네슬레)와 같은 기업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2018년에 Bayer과 Monsanto가 통합되어, 전 세계 종자의 50%를 Bayer-Monsanto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rgill은 전 세계 곡물 유통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차리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산되었고, 누가 생산한 것인지 이 3가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유념한다면 먹거리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34%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고 온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힘 또한 농업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토양과 그 토양을 관리하는 농민에게 그 ‘힘’이 있죠. 토양은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격리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지구의 생태적인 복원력을 높이는 일을 농업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아캄페시나의 구호에는 “소농이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주체가 농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농생태학입니다. <그림 22>는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생산자들이 농생태학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농의 농생태학적인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22> 시동공동체 언니네텃밭 생산자의 밭



※ 출처: 발표자 제공

<그림 23> 함께 토종씨앗



※ 출처: 발표자 제공

두 번째는 토종씨앗입니다. 상주 지역에서 저를 비롯한 농민들은 어르신들이 키우고 있던 토종씨앗을 이어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74세가 된 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참깨 씨앗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최소 7~80년, 어쩌면 100년 이상 됐을지도 모를 토종씨앗을 이어받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씨앗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환경적 측면과 먹거리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비아캠페시나가 식량주권을 최초로 제안했고, 올해 25주년인 기념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식량주권은 땅이고, 물이고, 종자이고, 빵이며 그리고 연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거리를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주체로 농업과 농민이,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김정열 대표님의 답변

Q. “탄소중립에 있어서 타 선진국들은 농식품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과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8%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간극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A. **김정열** | 현장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로 인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 그로 인한 농민들의 처지 등에 대한 현장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과의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정책협의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시스템을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보고, 농업과 먹거리를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농민들이 배제되는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했는데요. 생계가 날씨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A. **김정열** | 사회적,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보험으로 일부 보상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물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농가에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농민이 져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에 대한 농민교육과 정보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농촌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요.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농촌 유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김정열** |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청년들이 살 만한 집이 농촌에 없고, 청년들이 농사지을 토지

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 생산을 통해 적정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 그 가격이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수경농업, AI 로봇 농업 도입 등 새로운 농업이 등장했는데요. 과연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지 궁금합니다.”

A. **김정열** |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 대책으로 스마트팜, 디지털농업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스마트팜은 수경재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학비료가 들어간 양액을 공급하여 작물을 키워내는 거죠. 화학물질로 작물을 생산하며 ‘흙’이 존재하지 않는 농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 농민들이 시도하기에는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민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설령 비용을 부담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초기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 농업 구조 속에서 스마트팜, 디지털농업과 같은 농업은 소위 기업적 농업의 일부이자 기업만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후위기 시대에 농인 농업의 ‘직업적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김정열** | 제가 농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가 고조될수록 ‘농민’이야말로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

금은 비록 적은 숫자이고, 이 사회에 농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자신의 먹거리, 그리고 이웃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농민의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4.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자세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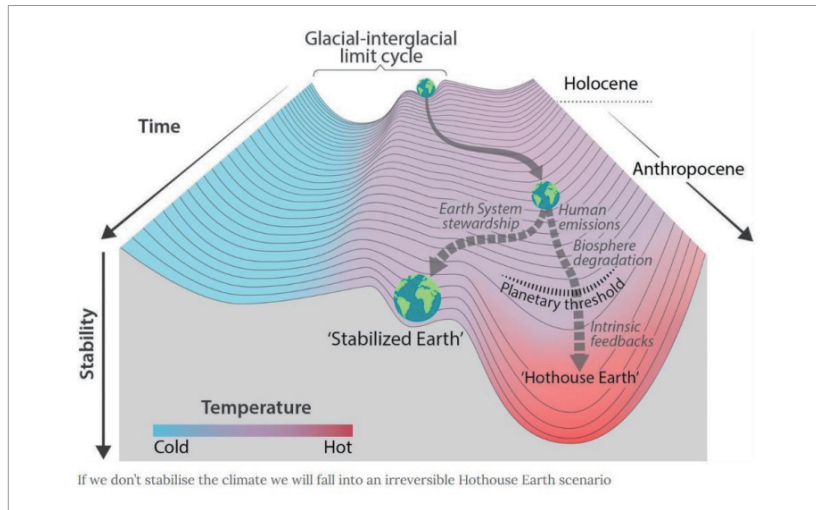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과연 기후위기가 맞을까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최근 3년간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2018년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기후위기'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국에서는 호주의 산불, 시베리아의 폭염, 동토의 해빙 등 이전에 없던 자연의 요동을 경험하면서 '멸종저항'이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한국에 퍼져서 '멸종저항 서울', '멸종저항 한국'과 같은 강한 액션을 동반한 활동을 만들어 냈죠. 작년 9월 24일, 한국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국회도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 상황'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럼 강연을 준비하면서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이론과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명백

하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림 24>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이론과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



※ 출처: © PNAS

탈성장,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다른 강연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

먼저 NPO는 무엇일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시민들과 함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뜻합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비전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에 기반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NGO는 NPO에 속한 하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환경·여성·소비자 운동과 같은 정치 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NPO나 NGO 모두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림 25>의 스펙트럼에서 왼쪽을 '기존 체제의 유지'로, 오른쪽을 '새로운 체제로 변화'로 본다면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림 25> 스펙트럼을 통해 보여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NPO의 자세



※ 출처: 발표자 제공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명칭은 물론, 법안 주요 내용에 녹색성장 포함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회구조도 바꾸지 않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수준도 미흡한 수준으로 결국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헌법소원의 주최로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단체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 얘기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바라는데, 현재 나온 법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 되는 거죠. 아카스펙트럼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 NGO와 시민사회는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그나마 이거라도’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는 가장 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구 체계의 해로움을 가진 그룹들, 기존의 산업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면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없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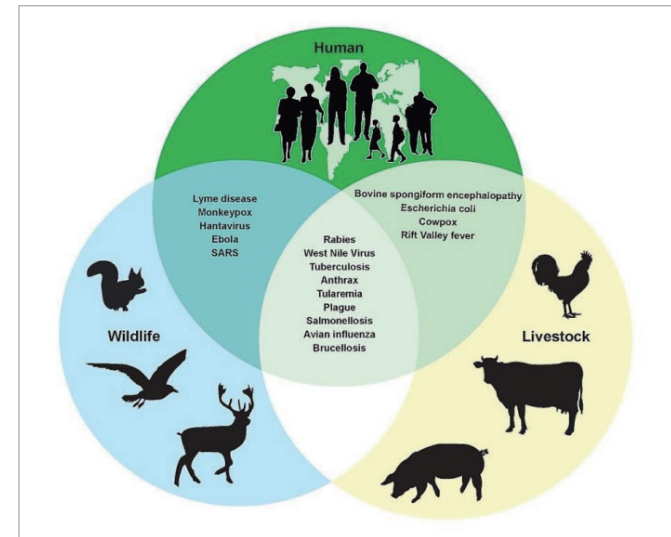
또 다른 위기에 숨겨진 의미

한편 기후위기 말고도 인류가 처한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은 종종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이며 매우 시급한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다양성의 위기죠.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기후위기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2000년부터 매년 약 650만ha의 산림이 사라졌고, 지구상 전체 생물 종의 100만 종 이상이 멸

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협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와 그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이고, 두 번째는 식물 채집과 사냥입니다. 이때의 사냥은 원시시대의 수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식을 위한 동물 생산, 커피, 담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토지를 이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림 26> 인수공통감염병 및 그 영향을 받는 인구의 예시
(Examples of Zoonotic Diseases and Their Affected Populations)



※ 출처: GAO analysis of USGS data (data); pp. 12-55

이러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2010년에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20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치 목표

(Aichi Target)’로, 2050년까지 더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숲을 포함한 자연 서식지의 손실 비율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저감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15%까지 복원하고, 국토 대비 육상보호지역은 17% 이상, 해상 보호지역은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2020년 9월에 UN이 아이치 목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개 목표 중 완전히 달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는 현재 33%만 남았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지금의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대멸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명백하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걸까요?

방향미 없는 변화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자꾸 빠르게만 가려고 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 값이고,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속력만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구 16,000명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마을에 우리나라 풍력발전 에너지의 15%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풍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죠. 서울에 지으면 안 되는 걸까요? 서울은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기피합니다. 태양광 시설이 아파트 미관을 해쳐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방향 없이 속력만 중시하는 거죠. 속도가 아닌

속력만 중시하는 상황은 다시 환경 수용성과 주민 수용성, 그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의 이야기,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합니다. 또한 속력이 아닌 속도를 중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유지하면 우리는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혹사한 대가로 인류 멸망의 전조에 들어섰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간의 편리 대신 불편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탈성장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정규석 사무처장님의 답변

Q.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업종,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그렇게 시행한 기업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정규석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몇몇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RE100²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합니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수사적 선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28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2014년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연합하여 개최한 Climate Week NYC에서 처음 발족되었다.

Q.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선거 의제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인들 역시 다양한 기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약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A. **정규석** | 우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부응하는 정책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정책 이행계획이 수반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 공약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유지를 이야기하거나 신규 공항 건설을 담고 있는 개발 공약 등이 한 명의 후보 정책 공약에서 공존한다면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Q. “시민사회에서도 정책의 속도 합의가 시급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A. **정규석** | 제 생각이 짧아서 가장 핵심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해’와 ‘피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그 관계’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현재 한국의 정치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역할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사회, NPO, NGO가 그 역할을 하면서 선도해야 할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메시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근 산림청은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 수정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벌채에 관한 기존 계획이 수정된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정규석** | 산림은 탄소흡수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전반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산림인데, 산림청의 관련 정책은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벌채도 위와 같이 산림을 협소한 가치로 규정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벌채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프로토콜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벌채와 산림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다면 현재 진행되는 산림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한국은 국제 기후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규정될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강연 끝에도 말씀하셨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을 위해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규석**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미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관세’라는 개

념도 이런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적 협력 관계 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성에서 벗어나서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위기 상황을 인식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등 민간이 조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단추는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1.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

박권일 | 사회비평가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공정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말 '공정(Fairness)'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사회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찬호 사회학자의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²⁹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수능 점수의 차이를 모든 능력의 차이로 확장하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학생들을 멸시하는 편을 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정성 담론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 능력주의 담론에서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의 차이로 문제를 프레이밍 하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분배적 정의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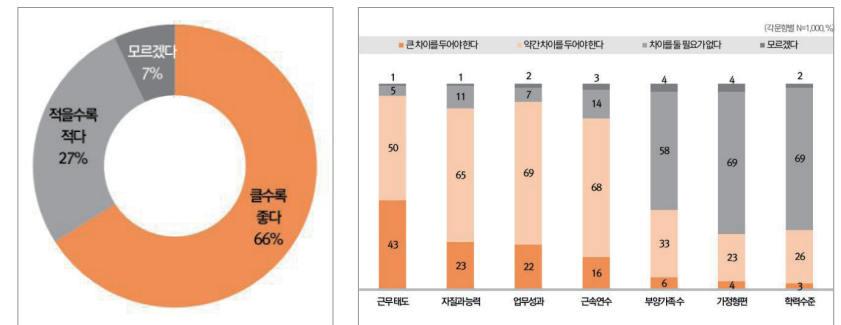
29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정도로 정의로운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국인은 ‘불공정’은 죽어도 못 참지만, ‘불평등’은 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룰이 잘못된 ‘불공정’은 못 참아도, 룰이 공정하게 적용된 ‘불평등’은 기꺼이 참는다는 거죠. 신광영 교수는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곧바로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³⁰ 결국 공정성이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림 27> 능력/노력별 보수 차이, 임금 차이를 두어야 할 조건에 대한 생각



※ 출처: 정한울-이관후(2018),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보고서』, 『여론 속의 여론』

한국 사회는 놀랍게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30 신광영(2016),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 73-95.

국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주의에 경도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림 27>을 보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입니다. 대다수가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자질과 능력,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무태도와 같은 노력 요인에 대한 보상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인의 남다른 가치관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 크리스천 웰젤의 '세계가치관조사'³¹를 살펴봤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산업화, 경제성장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도 체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적 풍요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는 많은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결정론, 제도환원론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가치관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결정적 매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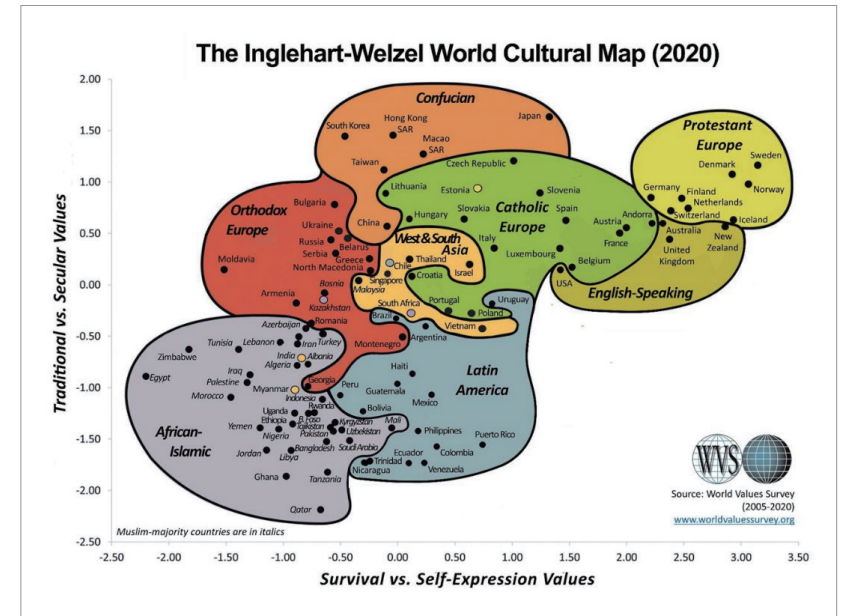
세계가치관조사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설문 문항들로 설계된 조사인데요. 네 가지 핵심 가치는 바로 전통적 가치와 세속합리적 가치, 생존적 가치와 자기표현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은 각각 두 쌍씩 Trade-off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가치가 커지면 한 가치가 줄어듭니다.

전통적 가치가 종교, 가족, 전통적 권위를 존중한다면, 세속 합리적 가치는 종교나 가족보다 과학과 기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표준화된 삶을 선호하

는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생존적 가치는 경제성장, 안정, 치안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로 소위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하고, 자기표현 가치는 경제성장을 넘어서서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 소수자와 약자에 관용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 4대 가치 중 핵심은 자기표현 가치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전면화되었습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위협이 감소하면서 인간의 관심사는 생존보다 더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의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은 친족·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유대와 관용, 타자에 대한 신뢰,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 등 거창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림 28> 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2020)



※ 출처: Ronald Inglehart; Chris Welzel(2020), 「World values survey」

31 1981년부터 40년 넘게 진행된 세계 100여 개국 학자들의 협력 프로젝트. 4~6년에 한 번씩 조사하며 지금까지 약 7차례 완료됨.

4대 가치는 경제성장에 따라 전통적 가치는 세속합리적 가치로, 생존적 가치는 자기표현적 가치로 이동하는 체계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림 28>은 최근 세계가치관조사를 바탕으로 그린 세계문화지도인데요. 그래프에서 가로축(X축)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자기표현 가치가 높은 것이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생존적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세로축(Y축) 상단에 위치할수록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은 것이고, 하단에 위치할수록 전통적 가치가 높은 것이죠. 우측 최상단에는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위치해 있고, 자기표현 가치와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좌측 하단에는 전통적 가치와 생존적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는 개발도상국들이 쏠려 있죠.

한국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세로축(Y축)을 보면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는데, 가로축(X축)을 보면 경제 수준에 비해 자기표현 가치가 낮고, 생존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특성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집착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보통 잘살게 되면 사회가 관대해지는데, 한국 사회는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회적 신뢰나 관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러한 특징을 ‘강한 물질주의’와 ‘약한 탈물질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1981년 조사 이후 거의 40년 동안 한국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항상 포함되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 평등(Income Equality)’에 관한 문항인데요. 예컨대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소득 불평등에 ‘압도적 찬성’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6차 세계가치관조사(2010~2014)에서 중국은 평등에 찬성(52.7%), 불평등에 찬성(25.8%)으로 ‘평등에 찬성’이 2배 이상 높았고, 일본은 평등에 찬성(28.6%), 불평등에 찬성(25.1%)으로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한편 능력주의 나라인 미국은 평등에 찬성(29.6%), 불평등에 찬성(36.2%)이었지만, 수치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평등에 찬성(23.5%), 불평등에 찬성(58.7%)으로 압도적으로 불평등을 선호했으며, 7차 세계가치관조사(2020)에서는 더욱더 극단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³²

결국 한국인의 가치관은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극단적으로 선호하고, 평등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위기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순위에 집착하고, 공공선에 대해 냉소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죠. 가치의 위계 서열이 굉장히 명확하며,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면서 뛰어가는 ‘소용돌이 사회’로도 불립니다. 모두가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며,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탈락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대안적인 삶의 모델 자체가 제시되기 어렵고, 역동적이지만 경제 압력 또한 극단적으로 높은 사회, ‘다이내믹 코리아’인 거죠. 이 모든 특성이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유독 낮은 자기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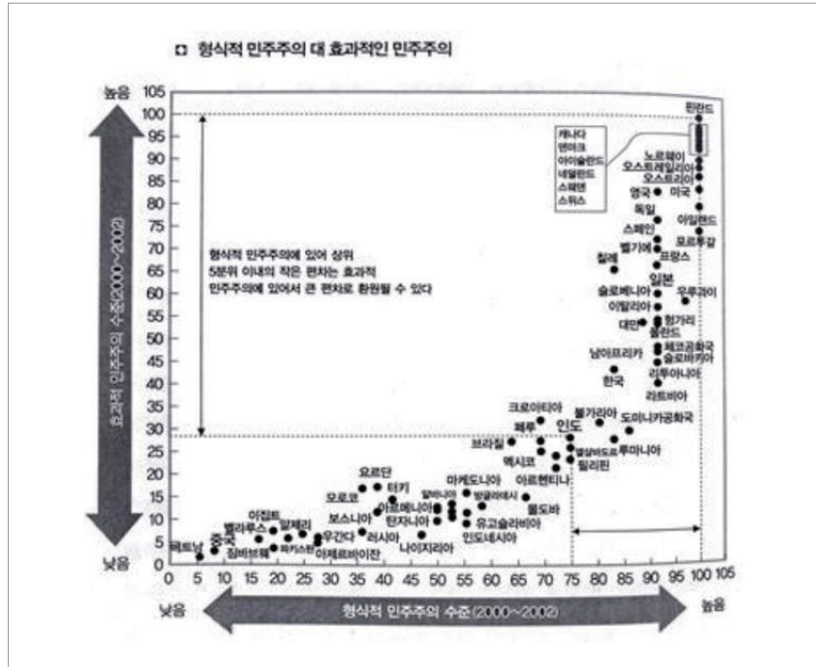
자기표현 가치는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도 한국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표현 가치 수준은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와 효과적 민주주의 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32 평등에 찬성(12.4%), 불평등에 찬성(64.8%).

데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민주주의이고, 효과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도로 존재할 뿐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림 29>를 보면, 북유럽, 서유럽 국가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가 모두 높습니다.

<그림 29> 형식적 민주주의 대 효과적 민주주의



※ 출처: 로널드 잉글하트, 크리스찬 웰젤(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지은주 옮김, 김영사

반면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럽과 비견될 정도로 높지만, 효과적 민주주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³³

33 EIU(2020), 『Democracy Index 2020』.

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완전한 민주주의 23개국 중 최하위(2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시행한 조사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최하위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최상위를 오가고 있죠.

이에 정치학자들은 “정치 문화의 면에서 다른 완전한 민주주의에 크게 뒤지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비해 민주주의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³⁴ 자본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까지는 나아가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평등’이 피어나는 사회를 위하여

많은 한국인은 불평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정’ 담론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중산층)은 3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상류층)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면서 야구 경기에 참여조차 못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거나 “억울하면 노오력하라”고 멸시한다는 거죠. ‘과정의 공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결과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결국 현존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부정의’로 귀결되고 맙니다.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자 해커&피어슨이 미국의 양극화가 심해진 원인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민주 양당 중심 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결국 문제는 정치에 있습니다. 한국도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

34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pp. 25-43.

에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양극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화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 보수 양당 경제정책과 정치 대표성 문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진보 정당이 출현해야 합니다.

특히 능력주의는 차별, 배제, 소유권 중심의 삶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나아가 지구에서의 공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고도성장주의의 강한 동기를 유발한 능력주의를 버리고,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환기해서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사람들이 희소 재화와 공공재를 공평하게 분배 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구체적 평등주의(Specific Egalitarianism)’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국적 사례가 ‘국민의 69.7%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주요 공공복지를 공평하게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불평등에 찬성’이 훨씬 높지만, 자신이 경험한 종류와 관련해서 ‘평등에 찬성’이 높다는 것을 희망의 단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등이나 형평에 집착하기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지 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박권일 사회비평가님의 답변

Q. “강연에서 한국과 비슷한 사례의 국가로 ‘싱가포르’를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자기표현 가치는 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박권일**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과 싱가포르의 역사적 경로를 보면, 오랜 권위주의 정권, 즉 정치적 독재가 존재했다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독재국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한국과 싱가포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한국 사회에서 자기표현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강연에서 말씀하신 평등한 복지정책의 구체적 경험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박권일** | 복지의 경험이 확장되어야 구체적 평등주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보수 양당 정치체제하에서는 복지 확대의 정치적 동기나 유인이 적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 양당 정치체제를 균열시키고 진보적 정당이 강력한 현실정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개인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강연을 듣고 나니 과연 이게 진정한 해법일지, 능력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이 또한 끊임없는 성장을 강요하고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박권일 사회비평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박권일** | 개인이 역량을 키워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각자도생’이겠지요. 그러한 각자도생 사회야말로 경쟁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인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옥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반면 기득권 집단에게 천국처럼 안락하겠지요. 이런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하

고, 모두가 함께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Q. “능력에 따른 차별을 수용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소위 ‘불평등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 **박권일** | 저도 최근 질문과 관련된 내용의 책³⁵을 굉장히 절망하면서 썼는데요. 데이터를 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능력주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포럼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특권’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특권에는 민감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수능, 고시를 비롯한 각종 공채 시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득권, 자격증만 있어도 생기는 지대 추구적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노동 현장에서 숙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보상은 굉장히 낮죠. 예컨대 엔지니어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도 87~9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잠깐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블루칼라 노동자가

일해서 중산층이 되기 어려운 사회이며, 오로지 인지 능력, 학습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되고 특권을 얻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보상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5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2. 학력·학벌 차별 반대운동과 시민사회 연대하기: 학력 칸을 넘어 자유와 무지의 세계로

윤서 | '투명가방끈' 활동가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그림 30>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 출처: 발표자 제공

제가 활동하는 투명가방끈의 정확한 명칭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입니다. 투명가방끈은 대학입시에 문제의식을 갖고 거부하는 행동으로 시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작년 수능 날에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의 계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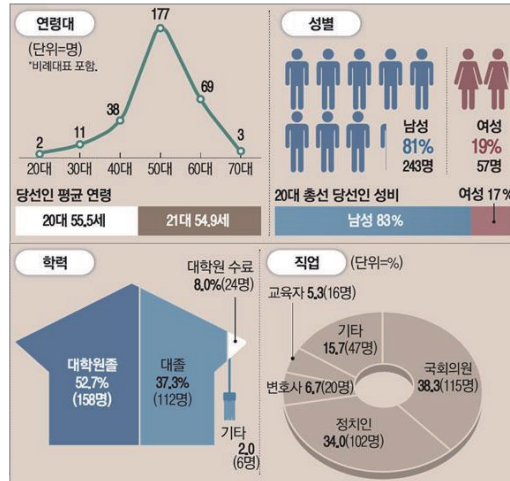
저도 2018년에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는데요. ‘불안한 삶 STOP’, ‘학력·학벌 차별 STOP’, ‘경쟁입박 STOP’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2018년에 작성했던 공동선언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우리의 삶을 당장 바꾸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닿고 새로운 고민과 상상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면 소위 악플이 달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부터 “그냥 네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죠. 물론 우리의 선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의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게 된 사람들과 그 계기는 다양합니다. 고3 수험생이 가장 많고, 대학교 자퇴생, 저와 같은 재수생 등이 있죠. 저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거부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오직 대학입시만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그 길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학교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갈 만한 학생 1%만을 위해 굴

러가고, 나머지 학생 99%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거부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31>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 분석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매일경제

그러나 꼭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림 31>을 보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연령대 과반수가 50대이고, 남성이 80% 이상, 학력의 90%가 대졸 이상, 직업 중 직업정치인의 비율이 38.3%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한 총 1,118명의 후보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은 989명이었고, SKY 출신은 103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한겨레에 “국회에서 동창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³⁶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당당하게 국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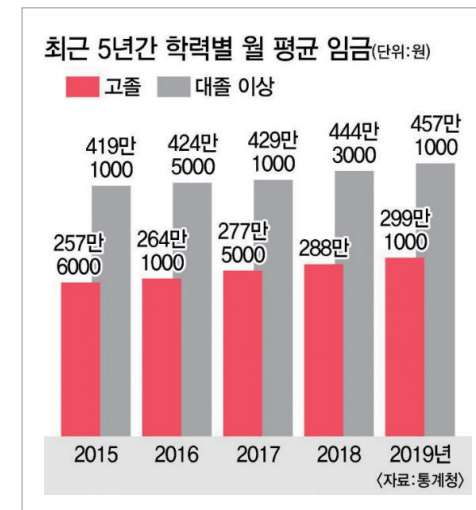
36 윤서(2020.04.08), “[왜나면] 대학을 거부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936166.html>(검색일: 2021.11.23).

원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시다. 이렇듯 국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소수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해진 학력 차별, 소외되는 청년들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불평등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 차별’을 빼자는 의견을 냈다가 철회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력 차별은 이미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첫 번째로 익히 알려진 문제는 ‘학력이 곧 경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32>에서 최근 5년간 학력별 월 평균 임금을 보면 고졸과 대졸의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림 32> 최근 5년간 학력별 월 평균 임금



※ 출처: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각 연도); e-나라지표, 「학력별 임금 격차」

승진 체계 또한 달라서 고졸 직원은 대졸 직원보다 오래 일해야 승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노동과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조건에서 승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 활동가의 사례를 예로 들면, 저학력자와 대졸자의 강의료 지급 기준이 달라서 강의료를 적게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활동 경력이 풍부한 것과 별개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낮은 강의료를 책정받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대졸자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사람들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일할 때 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서인데 요. 만약 일할 때의 차별을 넘어서서 일 자체에 진입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차별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곳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청소년지도사, 성폭력상담원, 군 장교 등의 자격증이나 직업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이 사회복지사나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학력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데, 그 자격을 인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격을 인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중 요구이며 어떤 이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학자금 대출,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은 무조건 대학생일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대학 비진학자 청년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낮습니다. 청년정책의 대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비진학자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받았던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청년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모든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도 필요할 것이기에 청년정책의 대상이 꼭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길도 함께 간다면

활동을 하다 보면 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학력 평준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완전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주변 활동가 중 한 분은 “내가 유일한 중졸이어서 속한 집단의 학력 평준을 크게 낮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는 단 하나의 학력만 있기보다 다양한 학력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르고 낯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시도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대안인 ‘함께하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라퐁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성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청소년들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학력 차별 역시 누군가는 스스로 학력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별당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고 합

리적인 차별이란 그저 적나라한 차별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학력도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력이 언제부터 학력 차별의 이유가 되었나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학력’이라는 성에 갇혀서 내 인생이 언제 시작하는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이라는 먼 길을 같이 시도하고 함께하면서 연대의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윤서 활동가님의 답변

Q.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할 때 저마다의 계기를 낭독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던 내용과 2022년 올해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A. 윤서 | 크게 다른 점은 못 찾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자면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답지 못한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과 사회가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자 학생들의 삶은 코로나 시국이건 입시제도가 어떻건 간에 비슷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Q. “2018년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한 윤서 활동가님을 비롯해서 예전에 대입거부선언을 한 활동가들은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윤서 | 무척 다양합니다. 활동가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창업을 한 분도 있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니

다.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대학전공을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듯이, 거부선언을 해도 아예 관련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Q. “‘투명가방끈’ 외에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이나 모임,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A. 윤서 |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명가방끈 외에는 광주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년액션(출신학교차별금지법청년액션)’ 등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유에 학력 차별도 들어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차별금지법과 학력 차별을 연결 지어서 목소리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학력·학벌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사회에 학력 차별 문제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강연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연대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A. 윤서 |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일수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대학에 갔을 것(혹은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학벌으로 나이 묻지 않기, 이력서에 학력 기재하지 않기 등 당연하게 상대방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상정하거나, 대학에 갔다고 생각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 혹은 대단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대학 중심 사회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어떤지, 대졸자인

나와 대졸자가 아닌 동료의 복지가 다르지는 않은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왜 대졸 이상의 조건이 달린 건지,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대학에 가야 제대로 살 수 있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말에 녹아든 차별을 모른 척했던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학력·학벌 차별에 반대하는 투명가방끈 같은 단체의 글을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기존에 많은 청년정책이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이 소외되는 차별을 낳았는데요. 만약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이 마련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윤서** | 현재 비진학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더 많은 시도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비진학 청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집 등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 사회적 분위기 등... 그 중 특히 비진학 청년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사회관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직장 혹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비진학 청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주는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3. 교육은 학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운명과 능력을 거스르는 교육에 대하여

정용주 | 교사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저는 학생들이 집을 벗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능력주의, 입시 위주로 점철된 한국 교육의 현실

강연에 앞서 교육에 관한 연구 중 흥미로웠던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핀란드, 프랑스, 한국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를 질문했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학생들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못한다고 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선생님, 천천히 해주세요. 어려워요.”와 같은 얘기를 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이 듣는 말은 “너 이거

못하면 애들한테 무시당해.”, “너 이거 못하면 선생님께 혼나.”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벗어나서 ‘못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선생님에게 혼난다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결코 가족의 연장선이자 괜찮은 연대의 공간이 아닌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언할 수 없는 차별과 특권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능력주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존재합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출발점이 다른 비능력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교육 문제만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1년간 파견 근무했을 때 잊을 수 없는 2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첫 번째 광경은 수능 날 교육부 기자실에서 수능 시험을 브리핑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각 과목의 종료 시각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고, 올해 수능 난이도를 매기고, SKY 등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점수 합격선을 분석하는 거죠. 이때 보도하는 기자들 또한 대부분 ‘그’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들에게는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광경은 교원 노조와 협의하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항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일종의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다른 경로로 들어왔으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거죠. 불평등 문제를 불공정 문제로 덮어버리는 이 광경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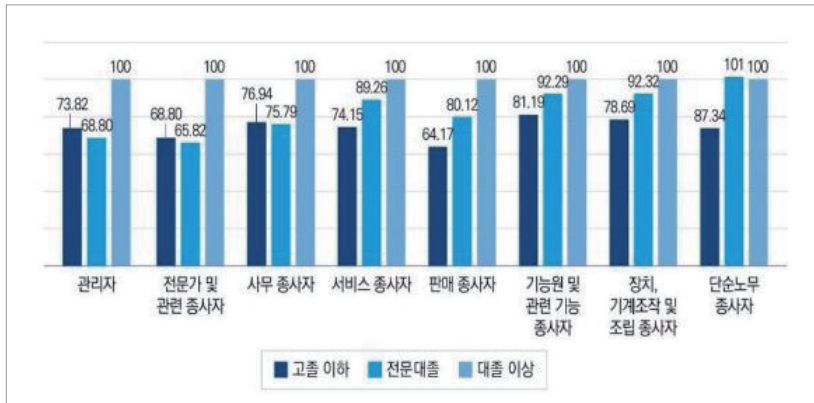
균등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는가

1950~1960년대에 영국은 보편적 교육과정 수립에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1944년 교육법 제정 이후, 그래머 스쿨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이미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질 낮은 공동교육을 받게 되면 수준이 후퇴한다고 봤던 거죠. 이에 교육평등주의 학자들과 노동당 정치인들이 저항하면서 1965년 이후에 그래머 스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종합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수립될 때 교육은 한 사회가 구성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책 <능력주의>³⁷ 후반부에 나오는 첼시 선언에 따르면 ‘기회균등’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능력, 신분, 지능에 상관없이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저마다 좋은 삶을 누리며 존엄한 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것과 노동시장에서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관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 연결성을 끊어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한 나라의 불평등은 교육과 입시의 교집합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례하는데요. 한국은 교육이 곧 입시이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그림 33),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그림 34) 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복잡성과 다층성은 오직 교육의 입시가 좌우하게 된 겁니다.

37 마이클 영(2020), 『능력주의 -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유강은 옮김, 이매진.

<그림 33>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 수준



※ 출처: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그림 34>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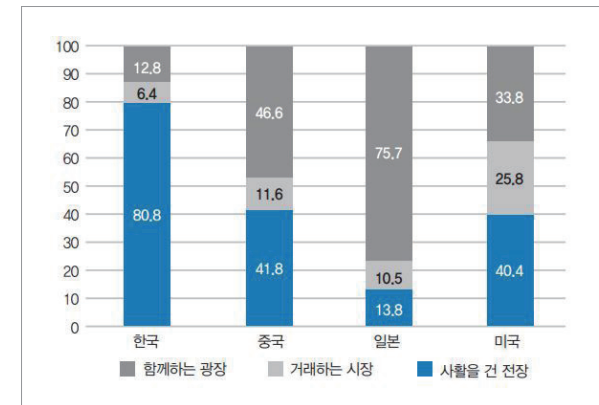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국 한국의 교육은 전쟁과 다름없으며, 학생이 쓸 수 있는 일종의 무기는 부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그림 35).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계속 발전하는데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일반고로 진학할 예정

인데요. 본래 대학에 갈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의 의미가 있을까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외되는 또 다른 학력주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 35>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 출처: 김희삼(2017),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세대 간의 릴레이 경주를 끊어내는 두 가지 축

보편의 삶이 보편화되지 않은 공포가 끊임없이 입시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고 ‘양반 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부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시험 경쟁에 뛰어다니는 것이 기회의 평등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계층 이동과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경쟁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고, 공정에 대한 인식 수준

은 높은 민주적 불평등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답론은 ‘개방성’이라는 민주적 이상과 연결되면서 소수의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를 갖게 될지는 전적으로 운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미래를 갖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³⁸ 이 또한 고소득층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가 아이의 성장 발달에 개입하는 조기 교육부터 이미 육아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개인의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인생의 출발점을 물려받는 ‘세대 간의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교육 내에서만 혁신할 게 아니라 고졸 노동자의 노동과 복지의 질,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이 좋아지면 교육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의 원리에 의해 오직 최상위에 속한 사람들만 대부분의 보상을 받는 간극을 줄이자는 겁니다. 기준선을 정해서 낮은 학력이어도 일정량의 보상을 보장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정용주 선생님의 답변

Q.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 환경 등 선부른 정책

38 리처드 리브스(2019), 『20 vs 80 사회』, 김승진 옮김, 민음사.

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A. 정용주 | 먼저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넘어서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과 상관없이 행복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개혁에서 학생에게 좋은 교육, 학생의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이야기했지만, 학생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고교학점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행복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면, 고교학점제는 복합적 건축물과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선택의 폭 확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 학교 공간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발, 선택과목 확대(학교 간·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 방안, 선택과목 다양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선택과목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과별 성취 기준 설정 및 조정 문제,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대한 문제, 미이수 예방 및 후속지원 방안, 학점제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 수급과 근무 여건 문제, 양질의 강사 확보 문제, 학생의 책무성 증가에 따른 미이수 예방 문제, 교육과정 및 시설 측면에서 학교·지역 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강연에서 아시아권 지역에서 형성된 ‘시험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유독 아시아권에서 시험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정용주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발행한 2015년 보고서인데, 제목은 「아시아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 : Sociocultural Impacts on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움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서 시험 문화를 분석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나라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내모는 평가 집착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국가를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의 작고 섬세한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규격화해 학생들을 기록의 그물망에 가두게 되고, 고부담 평가에 노출시킵니다. 그 배경에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출세라는 정당화 기제가 작동합니다. 능력주의가 신분 사회와 연결된 전근대적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고부담 시험은 더 나은 학교와 고등 교육은 물론, 더 많은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 중심적인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다른 관련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Q.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거나 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한국 교육 시스템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A. 정용주 |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의 시험 방식은 개편되거나 폐

지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더욱더 유형화된 공부에 길들여지는 것과 미국 등에서 표준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향이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수능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수능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표준화 시험이 고교학점제와 연동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도 수능 체제의 개편을 강제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교육이 실시될수록 격차는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 학생의 다면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암기보다는 활동과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다면적 능력의 발달을 위한 교육과 평가는 결국 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제도가 되더라도 이전 교육제도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화 방향이 교육 격차를 더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개입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개인의 자기 계발을 통한 능력 향상 등 능력주의를 통해 이룩한 성과도 존재하는데요. 능력주의는 본래부터 불평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능력주의의 순기능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A. 정용주 | 우선 능력과 능력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능력(Merit)은 개인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능력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능력주의>의 저자 마이클 영(Mi-

chael Young)은 책에서 능력주의의 출현(The Rise of the Meritocracy)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지능지수와 시험 결과, 개인의 능력만을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가 실현되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세습주의에 반하는 매우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차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엘리트들이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변해가는 현상을 그려냅니다.

마이클 영이 그려내는 능력주의는 능력주의가 가진 명과 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개인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의 오랜 주제였습니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는 ‘무엇이 개인의 능력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지능, 신체 능력 등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비능력적 요인이므로 개인의 능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추천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마이클 샌델에게서도 일정 부분 계승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주의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이 사회적으로 배태되고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 노동, 복지가 통합된 체제를 그리면서 능력과 보상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Q. “여전히 한국 사회의 대다수 사람은 능력주의를 공정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능력적 요인보다 비능력적 요인이 좌우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차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

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A. 정용주 |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제도를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격차와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의 200년 연구,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에 따르면,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화, 양극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을 지역과 계층으로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수능의 영향으로 부모의 문화 자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능력주의 요인이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투자, 학교 교육에서 책무성 강화를 통해, 교육에서 부모의 배경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실천을 한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4. 자본과 국가는 노동의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아시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비영리 변호사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평등의 논리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 ‘김군’³⁹이 승강장안전문(일명 스크린도어)을 고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참한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저는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2008년, 2011년에 진행된 비용 절감을 위한 구

39 유족이 본명으로 부르기를 원하지 않아서 붙인 이름.

조조정 및 안전업무의 외주화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숙련/단순업무와 핵심/주변업무를 나누고, 단순업무와 주변업무 노동자를 외주화했습니다. 경영·기획과 관련된 업무는 핵심업무로, 현장에서 기계 및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는 단순업무로 구분했던 거죠.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은 불가능했고, 안전업무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단히 낮은 비용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림 36> 2016년,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도중 사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현장



※ 출처: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런데 문제는 서울메트로에서 기존 직원은 그대로 대우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100%를 지급했던 인건비가 외주로 바뀌면서 70%로 책정됐고, 다시 외주하청업체가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가면서 노동자는 그 나머지를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 강도도 높고 위험한데 임금은 낮아서 새로 입사하려는 사

람이 줄어들자 서울메트로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거 고용해서 업무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교여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군'은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19살에 사망했습니다.

사실 '김군'이 맡았던 안전업무는 주변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업무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8호선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업무는 핵심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외주화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그 기준 또한 불분명했던 거죠.

<그림 37>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소속 회원들이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 출처: 뉴스1코리아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김군'과 같이 핵심업무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고, 서울메트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공정'을 외치며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림 37>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 모습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감사원까지 거치게 되었고,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의 평생급여 차액이 5,589억 원이 발생한다는 비용 절감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실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배했다는 공정 채용 절차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적의 논리대로라면 본래 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해고하고 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거쳐서 다시 채용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일자리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모두 평등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노동 현장의 불평등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문제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소송을 거쳐 싸웠고 결과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해서 특별히 인정된 거죠. 여전히 다른 기간제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애초에 정규직을 뽑지 않아서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사와 동일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능력주의의 논리, 공정 채용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방송작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현재 MBC보도국에서 일했던 두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방송작가는 MBC보도국에서 2011년부터 거의 10년간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의 일부 꼭지를 담당했는데도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한국 방송작가는 TBS를 제하고 모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MBC는 방송작가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른 방송작가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일자리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부당한 노동 환경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곁에서 생활 전반을 돕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겨우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과 재정 부담도 높아진다는 비용의 논리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의 논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성, 여성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니다. 특히 5~60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노동의 업무 강도와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게 평등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주노동자 역시 비용의 논리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은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가 환영받는 등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용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질 겁니다.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질 것이고, 임금 수준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최저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틀린 평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노대체 평등은 무엇일까요? 노동에서의 평등에 관한 법규를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해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원이 능력에 따른 선별 절차를 강조했던 이유도 법 때문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

국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임용 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꼭 평등에 관한 판결이나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영 주체의 경영권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떤 면에서 서로 충돌하는데요. 2003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된다’는 기업 중심의 논리가 나오니다.

이렇게 감사원, 대법원 등 헌법기관이 평등을 왜곡하고, 노동자 중심이 아닌 국가와 기업 중심으로 평등의 논리가 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노동의 불평등에 맞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2017년, 직장에서의 갑질을 없애자는 취지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는데요. 오픈 카카오톡방의 익명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직장 갑질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에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에 알리고, 법에 담는 작업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노동 문제를 딱딱하지 않게 친근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활동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의 노동의 가치, 평등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평등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학습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왜 바로 서야 하고, 왜 필요한지 시민들이 인식한다면 사회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38> 직장갑질119 오픈카톡방 - 성심병원 장기자랑에 관한 제보 화면



※ 출처: 직장갑질119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윤지영 변호사님의 답변

Q. “강연에서 노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직장갑질119의 성과 중 하나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 설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를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윤지영** | 한림대 성심병원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갑질119에 익명으로 들어와서 갑질을 이야기했고, 서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Q. “노동자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알지 못해서’이기도 한데요. 윤지영 변호사님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겪은 사례 중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이 부재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궁금합니다.”

A. **윤지영** |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요. 근로계약서를 통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로기간, 임금, 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다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툼이 될 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증거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Q.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나타난 노동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제보된 사례 중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동 문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윤지영** |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사생활에 개입하는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등장했어요. 주말을 보내는 동안 어디에 갔는지 보고를 해야 하고, 노래방, 술집, 당구장 금지 등의 원칙을 회사가 내걸죠. 이걸 어

기면 징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Q.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는 민간 영역에의 대책은 부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공부문 역시 비정규직 수는 줄었지만 처우 개선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정규직화’뿐일까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A. **윤지영** | 일단은 노동자의 개념을 넓히고, 노동자성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⁴⁰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프리랜서인 것처럼 취급되어 처음부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정규직을 남용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상용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차등 대우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결국 서울교통공사의 ‘노노 갈등’과 같은 사례를 낳았는데요.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40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함.

A. **윤지영**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정규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

발제 1. 우리 안의 차별: '나'라는 차별의 공간, 충돌하는 현장으로서의 '나'

홍은전 | 인권·동물권 기록활동가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저는 장애인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운동의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자본주의적인 속도와 효율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 문명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들'을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큰소리치고, 한겨레 신문에 장애인과 장애인운동에 관한 글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안의 비효율적이고 나약한 모습들을 숨기고,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매일 제 안의 차별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하는 에너지는 거기서 옵니다.

노들야학: 지금까지의 삶을 무너뜨리다

삶을 바꾸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바뀌는 '어떤 순간들'이죠. 그것을 알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된 홍은전과 알기 이전의 홍은전을 도저히 같은 사람이

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의 지점을 통과하고 나자, 이제껏 아무 문제 없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모두 차별이고 폭력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그런 순간은 두 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2001년 '노들장애인야학(이하 노들야학)⁴¹ 교사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순간은 2019년 반려묘 카라를 만나서 '탈(脫)육식'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19년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순간은 제 삶을 무너뜨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림 39> 2002년 9월 11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던 장애인이 끌어내는 경찰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



※ 출처: 한국일보

2001년 서울 도심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어떤 인간들'이

41 1993년에 설립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출몰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등장한 곳은 지하철 서울역이었습니다. 어두운 선로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추자 2~30년간 집안에 갇힌 채 살아왔던 중증 장애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동권을 보장해라.” 그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를 온몸으로 들이받으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2001년에 그들을 노들야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방황하던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노들야학에 가기 전에는 그곳에 가면 막연하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노들야학은 예상과 달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장애인의 열악한 삶’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것, 52.3%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통계⁴²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이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노들야학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타고 온 버스와 지하철이 문제다. 네가 받은 학교 교육도 문제다. 네가 꿈꾸는 꿈, 네가 나누는 사랑과 우정, 그런 건 어떤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 모든 것과 싸우겠다.”

장애인을 만난 후, 저는 계단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건축물이 하나같이 장애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문제야. 너는 비정상이고, 쓸모없어, 집이야. 우리는 네가 싫어.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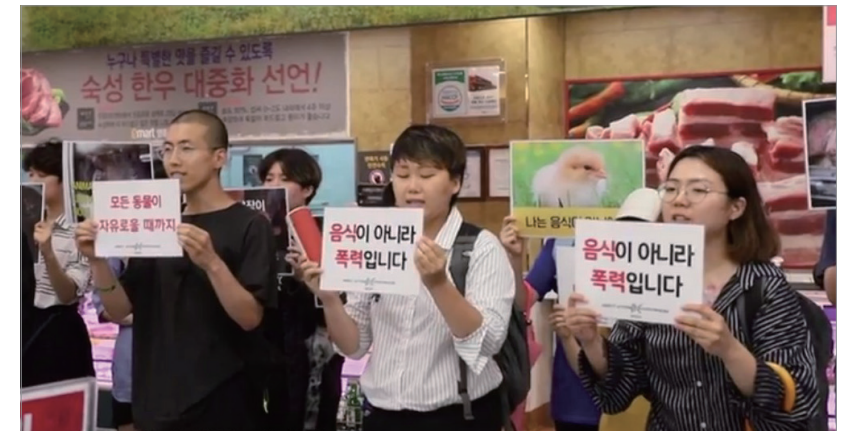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해되니까 저리 가.” ‘노키즈존’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장애인존’이란 말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문명 자체가 노장애인존입니다. 노들야학은 제가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세상’이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육식: 거대한 폭력을 마주하다

노들야학과 함께 인권 현장에서 20여 년간 활동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제 일상에 다시 한번 ‘어떤 존재들’이 난입했습니다.

<그림 40> ‘직접행동DxE(Direct Action Everywhere Korea, 이하 DxE)’는 2019년 7월 10일 이마트의 모 지점 정육 코너에서 ‘방해시위’를 벌였다.



※ 출처: 민중의소리, ©DxE Korea

그들이 처음 등장한 곳은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살장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소와 돼지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트에서 붉은 포장육이 된 동물의 사

체 위에 하얀 국화꽃을 올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크를 칼로 썰면서 사랑과 우정을 속삭이는 사람들 옆에서 외쳤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들은 바로 전 지구적 동물권 단체 ‘직접행동DxE(Direct Action Everywhere Korea, 이하 DxE)’로, ‘방해시위(Disruption)’를 통해 착취당하는 동물들의 현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 DxE의 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알 듯 모르겠는 기묘한 기분으로 봤습니다. 앞서 말한 방해시위뿐만 아니라 ‘공개 구조(Open Rescue)’ 활동도 지켜봤습니다. 어미 돼지를 가둬서 강제로 아기 돼지를 출산하게 하고, 다시 그 아기 돼지를 빼앗는 종돈장에서 아기 돼지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질서에 도전하고 있구나. 선의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고 있구나.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 싸우러 왔구나!’ DxE는 어떤 말보다도 행동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우리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같은 공간인 광화문에서 DxE가 가슴에 피 분장을 하고 ‘착유 당하는 동물을 위한 고통의 연대’ 액션을 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의 불편한 진실과 일상화된 폭력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 우리 모두 고통 앞에 평등하다.”고 외쳤습니다.

‘얇’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얇은 제 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지만 어떤 얇은 제가 평생 쌓아온 세계를 한방에 무너뜨리며 옵니다. 노들야학을 만나고 느꼈던 것처럼, 동물해방운동을 만나면서 동물들의 죽음이 만들어낸 문명 위에서 인간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탈육식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력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몸이 결박된 채 약물을 주입당하고 고통받다가 죽는 실험실의 동물들, 그리고 인간에게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 착취당하고 고통받다가 죽는 소. 인간은 ‘여성’인 소를 감금하고, 계속 임신과 출산을 시키고, 새끼를 빼앗고, 그 새끼가 먹어야 할 젖도 빼앗았습니다. 송아지가 먹을 젖을 하루에 두 번씩 착취하는 것을 ‘착유’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3~4년 반복되면, 소는 더 이상 빼앗길 게 없는 ‘생산성 없는 몸’이 됩니다. 그때 소는 일어서서 힘도 없이 주저앉은 채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 모습은 비유할 것도 없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림 41> 트럭에 실려서 도축장에 온 소의 모습



※ 출처: 오마이뉴스, ©김명일 활동가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폭력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물이 착취당하고 고통받았던 잔인한 폭력의 이유는 ‘인간중심주의’였습니다. 20년간 인권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바로 그 ‘인간’이 이유였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의 인간, “이윤보다 인간을”의 인간, “사람이 먼저다”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20년 동안 장애인운동을 하고 기록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노들야학을 만나서 20년간 배우고 훈련했던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인권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오히려 배제당했던 존재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동물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 말은 결국 장애 비하, 장애 혐오에 등장하는 논리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동물을 둘러싼 폭력을 목격하면서 저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본 고통에 비해 제 말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만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권에서는 배운 적 없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동물해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들야학은 저의 두 번째 학교였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연대하는 것, 세상의 질서에 제 몸을 끼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제 몸에 이 세상을 맞게 바꾸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노들야학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세 번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학교였습니다.

차별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이 견고한 질서를 들이받을 때만 그 폭력성이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집니다.

저는 차별 없는 세상을 감히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니까요. 저는 부족하고 무지하여 언제나 ‘차별하는 존재’기 때문에, 차별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 세상에 저는 없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저는 그저 차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온갖 비하와 혐오를 감당하면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홍은전 기록활동가님의 답변

Q. “홍은전 기록활동가님은 ‘차별’과 ‘저항’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A. **홍은전** | 차별과 저항 모두 동물 본성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몸’이라는 것에 갇힌 존재들이고 그 몸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타자의 세계에 대해 다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만들어온 사회 규범을 통해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회 규범 속의 일부가 바로 차별이고요. 남성중심, 백인중심, 이성애중심, 비장애중심, 서울중심, 인간중심... 우리는 수많은 차별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사회 주류와 다르게 세상을 보려는 존재들을 만나 그 렌즈에 균열이 갔을 때 저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

지 않는 거대한 질서에 맞서는 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은 차별하고 차별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저항하고 해방하고 연대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Q. “저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는데요. 수십 년간 인권운동을 하면서 너무 느리게 변하는 현실에 지칠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홍은전** | 저는 매일 1만 보를 채워서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걷고 나면 마음이 좀 느긋해집니다. 많이 힘들면 적극적으로 일을 쉬기도 하고요.

Q. “이 힘겨운 시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감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A. **홍은전** | 좋은 동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글쓰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작업을 하면 사람이나 사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Q. “탈육식을 선언하고 동물해방운동을 만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배웠던 언어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껏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된 기쁨과 막막함을 동시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홍은전 기록활동가님의 유연한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A. **홍은전** | 저는 전혀 유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존재들(장애가 있는 동료들, 반려동물들, 그들과 ‘다르게’ 관계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존재들)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고 다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수많은 정체성 중에는 언제나 ‘눈 감는 자’, ‘외면하는 자’, 그러니까 ‘차별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운동과 동물권운동을 만났을 때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고 그 운동이 지향하는 세계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 의지로 한 일이 아니라 사로잡힌 것에 가깝습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

발제 2. 혐오 조장과 전파의 결절점, 유튜브

정수경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책위원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지금 유튜브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튜브가 어떻게 혐오 콘텐츠의 진원지가 되었고, 어떤 구조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시키는지 크게 3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방송국이 된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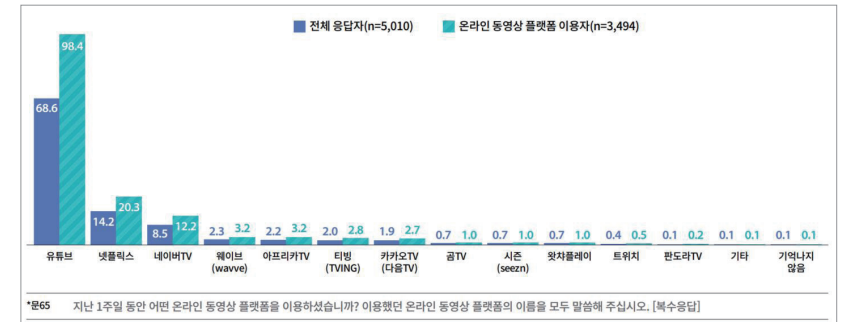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는 모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다만 유튜브가 일반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른 점은 'SNS(소셜 미디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시청자와 실시간 대화 형태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관계에 친밀감을 유발하고 정서적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기존의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하여 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류 미디어들도 각 프로그램의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적극 이용자' 수는 하루에 1억 2,200만 명 이상이고, 시청하는 비디오 수는 10억 1만 개 이상이며, 광고 수익은 86억 달러에 달합니다.⁴³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 유튜브 이용률이 98.4%, 전체 SNS 중 유튜브 이용률이 86.5%였으며⁴⁴, 유튜브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56.1분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2.5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응답했습니다.⁴⁵

<그림 4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별 이용률 (단위: %)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언론수용자 조사」, pp. 109

특히 유튜브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큰 핵심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어떤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자동적으로 유사 동영상을 생성 및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CES 2018'에서 유튜브 CPO 닐 모한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 중 70%는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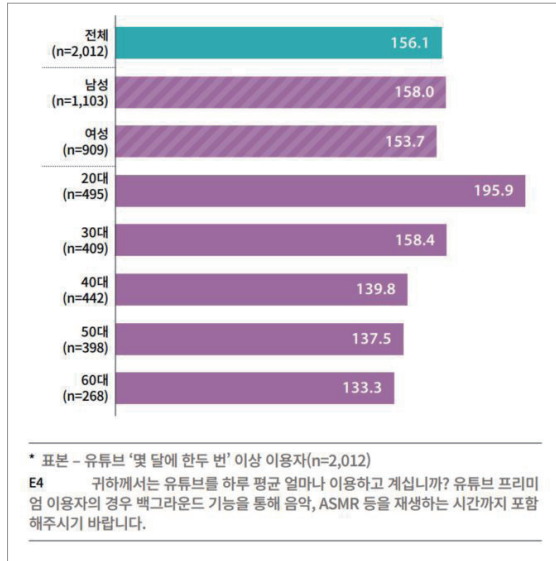
43 Omnicore(2022), 「YouTube by the Numbers: Stats, Demographics & Fun Facts」.

44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언론수용자 조사」.

45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총 동영상 시청 시간은 20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 43> 유튜브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분)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pp. 167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검색한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을 노출시키고, 이용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슷한 동영상을 보게 합니다. 비슷한 동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는 필연적으로 제한된 시청 이력, 관심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근래 비판받고 있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⁴⁶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추천 엔진부서에서 근무했던 기욤 샬로는 2018년 영국

46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추어 필터링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미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동영상을 많이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했던 유튜브의 전략이었습니다.

‘AI(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는 2016년부터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 머신러닝을 도입했습니다. 유튜브의 머신러닝 시스템은 해당 이용자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영상을 보게 할 것인가’를 학습했습니다. AI가 찾아낸 답은 ‘사실을 가볍게 언급하면서도 엉뚱한 추측과 음모론이 가득한 동영상’이 체류 시간 연장에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결국 이용자들이 무한한 동영상 개미지옥에 빠지게 되는 ‘토끼굴 효과(Rabbit Hole Effect)’⁴⁷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의 목소리’를 수익화하다

그러나 2019년에 진행된 연구⁴⁸에 따르면 유튜브는 극단주의와 혐오의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맹점을 분석하기 위해 349개 채널에 업로드된 330,925개의 동영상을 분석하여 4가지 타입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미디어였고, 두 번째는 음모론 콘텐츠를 생산 및 업로드하면서 정치적으로 우파에 속하는 ‘뉴라이트(Alt-lite)’, 세 번째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등 진보의 의견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 및 언론인들을 일컫

47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 유사한 동영상도 제공되고, 이어지는 추천 동영상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띠어 유튜브 동영상 시청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

48 Ribeiro, M. et al. (2020), 「Auditing radicalization pathways on YouTube」.

는 ‘지성의 암흑망(Intellectual Dark Web, 이하 IDW)’, 네 번째는 ‘극우(Alt-right)’ 성향의 미디어였습니다.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된 200만 개의 동영상에서 댓글 7,200만 개를 분석하여 상호 연관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입문자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처음에는 가벼운 음모론을 제시하는 동영상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극단적인 성향의 동영상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라이트(Alt-lite)’와 ‘지성의 암흑망(IDW)’ 동영상은 ‘극우(Alt-right)’ 동영상으로 가는 관문임을 알게 된 거죠.

이때 유튜브는 콘텐츠의 유해성은 상관하지 않고 영향력을 수익화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욕설, 비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인종 차별·여성 혐오·폭력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지하고 광고 및 기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의 수익 창출 구조와 이익 배분 정책은 다른 어떤 SNS보다 강력한 이용자 유도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은 가입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영상에 게재된 광고 수익을 유튜브와 공유할 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정치·시사 등 민감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광고주 판단에 따라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으면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유튜브는 ‘슈퍼 챗(Super Chat)’ 기능과 ‘유료회원제’를 만들었습니다. 슈퍼 챗은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때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기능으로, 후원한 시청자가 댓글을 작성하면 그 내용이 일정 시간 동안 채팅창 상단에 노출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유료회원제는 월 구독료를 지불한 시청자를 위해 마련된 ‘유튜브 채널 멤버십’으로,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그 밖에도 굿즈 판매, 프리미엄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로부터 직접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이전보다 정기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신뢰감이 생긴 시청자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합니다.

구독 관계를 통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구독자층이 거대해질수록 크리에이터는 ‘인플루언서’⁴⁹가 됩니다. 주류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10만~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집한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플루언서들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며,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Data&Society의 보고서⁵⁰에서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면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판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우익 인플루언서들은 초반에 진정성, 책임감 등을 어필하여 대안 미디어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주류 미디어에 대한 반문화적 저항 이미지를 형성하여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전략적 논쟁, 검색엔진 최적화 등 유명 셀럽들의 기술을 채택하여 팬층을 확보하고, 서로 연결된 ‘대안 인플루언스 네트워크(Alternative Influence Network)’⁵¹로 시청률을 올리며 극우 이데올로기를 판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혐오, 차별 발언을 하는 채널은 대개 ‘Talking head’ 포맷으로, 일대일 구조 혹은 비슷한 패널 2~3명이 함께 이야기하는 구조로 진행되

49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으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지칭하는 말. 팔로워 규모에 따라 ‘메가(MEGA)’, ‘매크로(MACRO)’, ‘마이크로(MICRO)’, ‘나노(NANO)’로 나뉜다.

50 Rebecca Lewis(2018), 「Alternative Influence: Broadcasting the Reactionary Right on YouTube」, Data&Society.

51 자유지상주의, 보수주의, 백인 국가주의 등 우익 정치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약 65명의 학자, 미디어 전문가, 유명 인사 등.

니다. 이는 준사회적인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를 구축하고, 채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널 삭제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유튜브 메커니즘과 생태계는 혐오 양산, 조작, 유통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혐오나 차별 발언,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허점은 여전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한 Mozilla⁵²의 ‘Regret Reporter’ Project에서는 32,380명의 유저들이 삭제 및 검열 조치가 필요한 3,362개의 불만 동영상 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동영상의 71%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으로 제시된 동영상이었고, 그중 12.2%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기준에 저촉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또한 영어권보다 비영어권에서 혐오·차별 콘텐츠 동영상이 60% 이상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영어권 중심으로 유통 및 소비되기 때문에 비영어권 동영상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며, 국가·언어권별 대책이나 조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인식의 재구성

2017년 중반부터 유튜브 정책 변화를 통해 ‘대안 우파’ 동영상 중 극우 동영상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치적 세력화’한 구독자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개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의 ‘기술적 개입’으로, 혐오 및 불법 유해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

소 의무 규정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혐오 장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한 과세, 혐오 콘텐츠 직접 기부 제한 등 혐오 콘텐츠가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의 개입’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권 교육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용어 사전’을 만드는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차별 표현을 함께 공유하고 개개인이 점검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디지털 시민의식을 획득하고, 조직력과 연대의식을 갖춰서 확대해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개입’으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영국·호주의 ‘온라인 안전법’⁵³ 등을 참고하여 온라인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한국 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 온라인폭력방지법 발의 등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감을 갖춘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계속 상충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과 정치인 모두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보도나 표현을 자제하고, 각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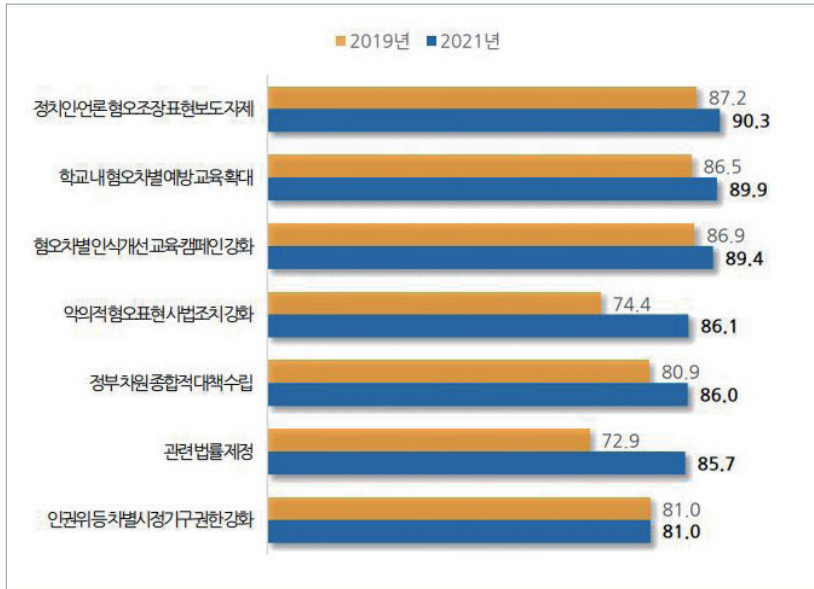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껏 유튜브를 단순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가 우리의 인식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

52 1998년 미국 AOL의 넷스케이프 팀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번더버드 이메일 등을 개발했다.

53 네트워크 집행법, 온라인 안전법 모두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사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혐오 발언과 불법적 게시물 관리 의무(사전 예방, 탐지 및 삭제, 그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

장 자체가 심각하게 굴절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44>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기제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정책 (N=1,200,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pp. 25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정수경 정책위원님의 답변

Q. “이번 대선은 유튜브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민연련에서도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유튜브 모니터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유튜브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건강한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정수경 | 유튜브는 개인과 법인,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주체가 각기 자기 채널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플랫폼이나 매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며 그 영향력도 지대합니다. 그러나 또한 놓쳐서는 안되는 특징은 영어권 중심의 상업 매체라는 점이지요. ‘연결성’과 ‘이윤 추구’,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유튜브를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유튜브에서 가동되는 저널리즘은 ‘신뢰성, 전문성, 공익성’ 같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가치가 아니라 ‘재미, 가벼움, 현장성’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영상들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의 시청 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확장편향은 더욱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이런 구조의 플랫폼에서는 신뢰할 만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렵고 허위 조작정보를 근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상업적 구조 안에서, ‘국가’라는 특정 주권 영역을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수익구조가 맞물려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전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용자들의 인식 또한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의 다채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공론장으로 유튜브를 바꿔낼 수 있다면, 전통적인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저널리즘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난 1월에 사이버폭력으로 자살한 ‘BJ 잼미’의 사망 소식이 대중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는데요. ‘온라인폭력방지법’ 등 법·제도적인 대응

외에 이미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대상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나 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정수경 | 사이버폭력은 공간만 다를 뿐 똑같은 폭력입니다. 불링(따돌림),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일 뿐, 똑같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한 법적 장치로는 ‘정보통신망법’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과 여성 등 사이버폭력의 대상자와 피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의무 조항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정보를 공개하며 인신공격을 한 경우는 사생활 침해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사이버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정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범죄의 경우, 사이버경찰청 신고를 통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방통위에 인터넷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만으로는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 협력과 상담 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대처와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을, 성폭력은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에 비

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⁵⁴ 성인의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정수경 |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디지털 교육은 대부분 ‘활용’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아동, 청소년과는 달리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좌우의 이념적 갈등이 큰데, 디지털 정보 유통의 분화와 양극화가 더해지면서 ‘에코 챔버(Echo Chamber)⁵⁵’ 또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효과 등 확증편향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학술단체, 정부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고 민간 차원의 감시망이나 시민 활동 등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포털규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이 포털 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54 김동준(2022.04.07), “‘사이버폭력’ 경험… ‘청소년 29.2%’, ‘성인 15.7%’”, 《뉴데일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07/2022040700034.html>(검색일: 2022.04.25) 참고.

55 뉴스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

A. 정수경 | 민주당이 발의한 안의 주요 내용은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이나 배열, 편집을 못 하도록 하고,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Outlink) 의무화, 위치정보를 통한 지역 언론사 기사 노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일단 이 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글과 같은 기업은 한국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뉴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결국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아웃링크 의무화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광고로 뒤덮여 있는 기사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장사'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서버 가동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 언론사의 경우는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휴 언론사에 대한 차별금지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포털 뉴스의 품질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의 제한도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 개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발의안은 포털이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포털과 언론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효과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좋은 측면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나쁜 측면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모두 고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수경 |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 판단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려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일은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채널과 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는 매체에서는 이용자가 확증편향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정 기능을 통해서 개인화된 뉴스 정보 제공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이 기능을 이용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채널들을 골고루 선택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거스르는 반대의 증거를 찾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알고리즘이 설정하는 확증편향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콘텐츠 내용에 대한 토론과 재논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경로 등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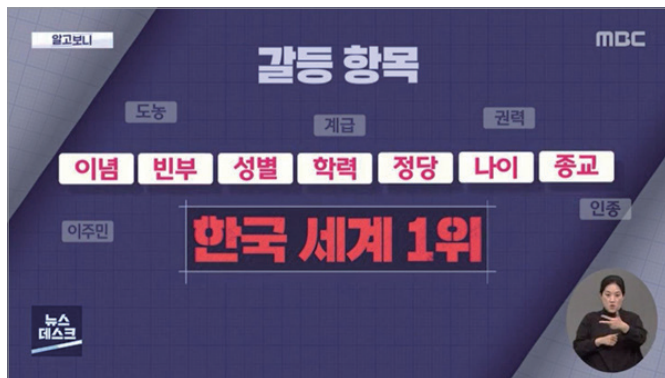
발제 3. 차별과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혐오를 자극하는가

하승우 | 이후 연구소장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저는 오늘 왜 우리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장려하고 방치하게 되었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을 확대하는 거대 양당 체제

<그림 45> 한국, 7개 항목에서 "갈등 심각" 응답률 1위



※ 출처: MBC 뉴스

2021년 6월, 국제여론조사기관 Ipsos와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가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⁵⁶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전쟁(Culture War)'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12개 갈등 항목 중 7개 영역(이념·빈부·성별·학력·정당·나이·종교)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증폭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림 46> 13~19대 원내 1·2당 의석 점유율

	1당	2당	합계	점유율(%)
13대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195석	65.2
14대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 97석	246석	82.2
15대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218석	72.9
16대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248석	82.9
17대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273석	91.3
18대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234석	78.2
19대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279석	93

※ 단 13~18대는 전체 299석, 19대는 30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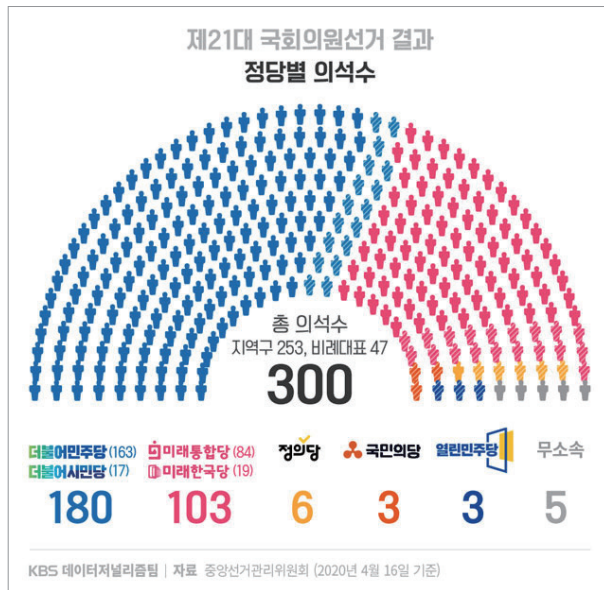
※ 출처: 노컷뉴스

20대 대선을 두고 '역대급 대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선은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늘 두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서 한국의 양당제 경향은 날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림 46>에서 13~19대 국회의 의석 점유율을 보면 사

56 Ipsos; King's College London Policy Institute(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실상 여야 두 정당이 국회를 점유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도 거대 양당 체제는 한층 심화되었고 국회를 구성하는 색은 단순해졌습니다.

<그림 4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이 단순한 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총선 때마다 과반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정당의 힘이 강해지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과거 독재 시대에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개혁적인 한 정당의 강력한 힘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적 진리를 독점하는 ‘진리 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현실정치에서 절대적

인 진리는 없으며, 과반 의석의 확보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진리를 독점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로운 상호 비판과 자기 성찰이 어려워집니다.

한 예로, 다당제 국가인 핀란드는 단일 정당이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핀란드 내각은 연정(연립정부)⁵⁷으로써 구성됩니다. 의회에서 연정 파트너를 맺은 정당 간에 정책 및 입법 연합을 구축하고 파트너 정당과의 협력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타협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양당 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야 두 정당이 절대적 다수로서 압도하기 때문에 누가 과반을 차지할지가 중요하며, 우리 편을 결집시키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 또한 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반대가 곧 다른 후보의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뉘는 겁니다. 제3의 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가능하고 결선투표제⁵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둘 중 한 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정치가 개방한 ‘혐오’의 문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이 어떤 정책에 관해 물어본다면 정치인은 구체적으로 답변해줘야 합니다. 지난 1월, 이번 대선의 전 후보자이자 윤석열 당선인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해왔

57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구성한 정부.

58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일정한 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투표.

고 어떤 이유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7글자로 설명하는 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민주주의야말로 더 많이 말해줘야 하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과하거나 번복하는 식으로 무마해버린다면 민주주의에 가장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로 ‘팬덤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가 정치인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팬덤정치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확신하며, 생각이 다른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실점에서 정치적 목소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치 의제를 만들게 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대 양당 체제인 미국은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능력주의 중심 사회가 확고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엘리트 중심 결정 체계가 정당화되면서 사람들의 역편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당한다고 느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모두 엘리트들이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평등한 문제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포퓰리즘에 설득당해서 분노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해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지지를 옮긴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일종의 문을 개방해줬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등의 구조적 원인 개선은 너무 어려우니,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으로 허용해준 것입니다. 그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흑인, 이민자, 무슬림에 대한 혐오는 점점 높아졌으며, 2021년에는 미국 대선에 불복한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림 48> 2021년 1월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한 채 수도에 모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에 항의하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정치가 사회적 차별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원인을 돌려 공격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의 저자 한나 아렌트도 전체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유럽 사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은 선전에서 더욱더 심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되었고, 정치적 접근방식에서 더욱더 옹호적이고 과거 지향적으로 되었다. 게다가 정당들은 어느새 중립적 지지자들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자신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

다. 그래서 유럽 정당 체제 붕괴의 첫 신호는 옛 당원들의 탈당이 아니라, 젊은 세대로부터 당원을 모집하는 데 실패한 것과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무언의 동의와 지지를 상실한 것이었다. 이 대중은 갑자기 냉담해졌고, 격렬한 적대감을 표명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갔다.”⁵⁹ 한나 아렌트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히틀러, 무슬림 등 전체주의 운동과 정치 세력의 등장을 허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변화는 정치 다양성에서 온다

자칫하면 한국 사회도 위험한 형태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에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 개혁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스스로 대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빛을 잃었습니다.⁶⁰ 22대 총선 때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지역정당 창당을 허용하여 지역 내에서도 정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정원을 늘리는 등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 개혁으로, 일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59 한나 아렌트(2006), 『전체주의의 기원 2』, 박미애; 이진우 옮김, 한길그레이트북스.

60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시 거대 정당은 불리한 선거제 개혁을 뒤집을 꾀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현재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부터 시도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화적 개혁으로, 학벌 중심과 능력주의로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추천제로 뽑아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능력이 아닌 우연으로 중책을 맡음으로써,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정치인의 등용보다 앞선 청소년 때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 만큼,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치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 2~30대 청년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기본 토대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하승우 소장님의 답변

Q. “이번 대선에서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힘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승우 소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하승우 | 여성 유권자의 힘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유권자의 힘이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정치에, 특히 낙선자의 정치에 큰 영향

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힘은 조직될 때 강해지고 정치인은 그렇게 조직된 힘을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조직되지 않는 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Q.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시범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당제 지향 선거제도로서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하승우** | 지난 총선 위성정당처럼 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꿈수로 쪼개기를 해왔으면서 마치 큰 변화인 듯 시범 도입을 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구태의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시범 도입한 지역에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은커녕 늘어난 수만큼 자당 후보를 더 공천한 것은 시범 도입하자고 하고서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제2의 위성정당 사태’라고 봅니다.

Q. “팬덤정치’의 위험성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부 열성 참여자들이 다수의 여론을 대변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묵살해버리는 데 있는데요. 팬덤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치적 적극 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하승우** |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팬덤정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뛰어난 정치인은 팬덤이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자를 모아야 하겠지요. 특히 한국 정치는 인물 중심이다 보니 정당보다 개인에게 주목하는데요. 저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팬덤이라면 조금 나올 수는 있겠

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팬덤일 수 있으니.

Q.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돈, 인맥, 경력 등)은 여전히 높습니다. 청년 주체들이 기성 정치권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탁되고 소모되기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하승우** |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자율적인 세력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를 완전한 비례대표제도로 바꾸고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아니면 일찍부터 정치에 몸을 담고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거공영제를 정말 선거공영제답게 만들어서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세력화하기가 좀 쉬겠지요.

Q.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혐오, 차별 요소가 있는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하승우** | 일단은 후보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겠지요. 혐오, 차별은커녕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에서부터 점검하고 그 후보들의 발언이나 토론 내용 등을 모아서 모니터링해야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차이가 드러나겠죠.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

발제 4. 현장에서 길을 찾다: 웃으면서, 혐오에 끝까지 대항하기

한채윤 |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끝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20여 년간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혐오의 활용

사실 '혐오'라는 표현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혐오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혐오는 어떠한 것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을 의미하며 그래서 비위생적인 무언가를 피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혐오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혐오를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자기 위로'입니다.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우월감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장애인을 혐오하면서 '나는 그래도 장애인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용도는 '두려움과 불안 해소'입니다. 자신의 몫이 줄어들거나 빼앗기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때 마음껏 타할 대상을 정해 해소합니다. 이주

노동자 혐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혐오는 너무 만연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동안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만 표출되었고, 공적으로 발언하면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았기에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입법이 예고되었던 2007년을 기점으로 혐오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혐오를 해야 한다'고 혐오가 정당화된 것입니다. 극우 정치와 보수 개신교의 정교유착, IMF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남성성의 위기, 인터넷의 엄청난 발전 등으로 인해 이런 혐오의 확산은 더 빠르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림 49> 2007년 10월 22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동성애'차별금지 법안에 있는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위한 운동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장현일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김영진 한일기독교원연맹 대표회장·전용태 성시화운동 대표.)



※ 출처: 뉴스엔조이, ©이승규

활동가로서 혐오에 대항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혐오의 조직화' 때문입니다. 혐오가 조직화되면서 공론장이 파괴되었고, 민주주의 작동

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혐오를 활용하여 정치에 이용하고 수익화했습니다. 이러한 혐오의 조직화는 이미 ‘종교’라는 거대한 조직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07년 교계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을 중심으로 일부 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빼 달라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후로 한국교회와 주요 교단이 연합하여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었고, 2018년에는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혐오의 논리는 과연 정당인가

또한 혐오의 확산은 공론장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 등의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편견과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언론이 그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정치가 이에 반응하면서 공론장이 파괴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공론장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국적인 인권조례 제정의 실패입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경우는 2012년만 해도 1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7곳이 제정에 성공했고 8곳은 실패했는데 실패 횟수가 줄어든 건 제정 시도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가짜뉴스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복사해서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쏟아지는 반동성애 민원 폭탄 때문에 인권조례 제정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혐오를 활용한 정치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실증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 역차별론 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젠더 갈등에 편승하여 여론을 부추기는 인기영합성 공약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전후로 혜화역 시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정치권이 혐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극적인 혐오 발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을 자극하는 이들은 강연을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혐오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뉘면서 동조하는 사람 간에는 심리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아군’과 ‘적군’으로 세상이 나뉩니다. 경제·정치적으로 유용한 혐오가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결국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혐오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당한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여성 혐오 진영의 이준석 대표는 이런 논리를 구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혐오냐? 정당한 나의 행동과 발언을 혐오라고 공격하는 건 올바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폄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의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혹은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정도면 많이 변했고 충분하다. 그런데도 자꾸 욕심내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건 나쁘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역차별의 피해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혐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

61 김용욱(2022.03.28), “[영상] 이준석, 대선 전 장애인 혜화역 시위 언급 발언 180도 달랐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4>(검색일: 2022.04.24) 참고.

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 새롭게 등장한 ‘트랜스젠더 혐오’입니다.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터프(TERF)⁶²’의 주장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은 여성 인권 후퇴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영역을 뺏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에 맞서려면 여성들끼리 뭉쳐야 한다며 ‘진짜 여성’이란 단일한 정체성을 내세웁니다. 혐오에 맞선다면서 인간을 차등 대우하는 혐오와 차별의 함정에 도리어 빠진 것이죠.

‘낙관’의 힘으로 연대하고 나아가자

조직화한 혐오의 고리를 끊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대안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퀴어문화축제가 보여주는 혐오에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면 그 주위를 혐오 세력이 거의 ‘포위’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옵니다. ‘나는 혐오가 아니라 사랑을 해. 혐오를 받아도 내 존재는 아름다워’라고 외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혐오에 대항하는 것은 혐오와 주먹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에 굴하지 않고 보란 듯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로서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장을 꾸준히 기획하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익 캠페인 ‘나는 엘라이입니다’ 방식을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엘라이(ALLY)’는 동맹, 협력을 뜻하는 ‘ally’에서 유래한 말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사회적 차별에 반대하고 고민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라이는 성소수자로서 차별

62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의 약자.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 여성을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를 가리킨다.

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서로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 옆에 서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하고 행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50> 2019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 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그래서 엘라이 캠페인은 인권 단체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하거나 서명, 행사 참여를 제안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권 단체의 후원회원이 되는 것도 엘라이로서 하는 일 중 하나이지만, ‘엘라이가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동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라이가 늘어날수록, 그 사회에서 혐오는 쉽게 활개를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 51> '나는 엘라이입니다' 거리 캠페인 엑스 배너의 모습



※ 출처: 비온뒤무지개재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든 접촉면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전보다 혐오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며 점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NS,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의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마디 말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혐오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적극적인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혐오와 차별이 큰 사회적 이슈이자 해결 과제가 된 것은 과거에 없었던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 성과를 활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법과 정책이겠지만, 활동가에게는 너무 거대한 일이며 우리는 그 외의 방식으로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대중 캠페인이 비록 혐오가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혐오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접촉하는 시간, 횟수, 사람 수 등 양적인 접촉면을 늘려야 합니다. 자극적인 혐오 발언은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다양한 자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뀐다는 '낙관'의 힘으로 버티고 나아가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한채운 이사님의 답변

-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친구, 교사, 학부모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분별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국내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지원이 미비하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 A. **한채운** |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가장 먼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매년 여름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여름인권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청소년거리이동상담센터 혹은 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울의 신촌공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 거리이동상담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 2014년에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정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권수정 의원이 노력하여 어렵게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서울시가 이 사업을 가장 잘할 단체가 아니라 부적합한 곳에 사업을 위임하는 바람에 결국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파행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할당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동성에 혐오 단체들이 서울시를 공격할 것을 걱정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쓴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서울시 예산을 받던 곳 중 한 곳을 택해 주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최종 정리된 답을 드린다면 현재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더 많은 시민들이 후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실효가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혐오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근거를 내세워 반박하더라도 가짜뉴스, 비논리 등으로 혐오가 정당화되는 상황 때문에 답답한 마음만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근거 외에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A. **한채운** | 가짜뉴스나 비논리가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가짜뉴스 때문에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기꺼이 믿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

람들에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설명해도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근거를 내세워서 반박한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왜 나는 설득을 하지 못할까’ 하는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한, 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들도록, 알도록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혐오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혐오하는 사람보다는 혐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양쪽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아직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혐오에 대응할 때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혐오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혐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뭔가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 등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노력이 실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Q.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균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새 판례를 제시했는데요.⁶³ 법조계에서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한채운 이사님은

63 박용필(2022.04.21),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자제는 위법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 만에 판례 변경”,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11613001>(검색일: 2022.04.24) 참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한채운** |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균형법 제92조 6항이 폐지되어야겠지요.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거의 유일한 법률이 균형법이어서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에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 법은 일반 장병들뿐만 아니라 특히 직업군인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긴 것이죠. (이는 변희수 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이 균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끌어내고 더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막고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다 명확한 인권 가이드라인, 지침, 내규 등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Q. “혐오에 대항하는 자세에서 ‘낙관’의 힘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데 낙관하기로 마음먹더라도 현실을 보면 자꾸 분노와 억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릅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A. **한채운** |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분노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면 이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으로 가라앉히고는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분노를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로 바꾸고는 합니다. 저는 분노가 이런 용도 정도로만 쓰이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낙관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무책임한 방기가 아니라, “세상이 빨리 변하지도 않

고, 좋아지는 거 같지 않아도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이 정도 저항이라도 해야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변화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기라도 했고, 포기하진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낙관을 말합니다.

분노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가능한 술 한잔하고 얼른 털고, 다시 다음날부터는 냉정을 찾고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분노를 오래 표출하려면 제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분노를 오기로 바꾸어 계속 싸울 ‘재생산 에너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혐오는 사뭇 다를지 몰라도 그 결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소수자들이 힘을 합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한채운** |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비해 점점 소수자들이 힘을 합치고 연대를 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19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이 길어지면서 각기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던 소수자 운동 진영이 점점 더 결속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 아직은 충분하진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연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길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더 연대하고 힘을 합치자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이 목표를 잊지 않고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고요.)

차별과 혐오가 갈수록 거대해지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여기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충분히 힘을 합치고 연대하지 못해서가 아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대해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방법으로, 이렇게 혐오가 돈이 되고 정치인들과 결합하는 것을 보다 정밀하게, 또 집요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들

활동의 자리 , 세상을 사랑하는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재구성과 시민사회'

발제 1. 젠더링 뉴노멀: '닭고기의 평등'을 넘어서

손희정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사회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의식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젠더 그리고 평등, 크게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가진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질병 X의 시대와 툴루세의 상상력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재난이 닥쳤으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 '미지의 재난'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대응 전략 '연구개발 청사진(R&D Blueprint)'에서 연구 대상 질병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에볼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등과 함께 미지의 '질병 X(Disease X)'가 포함됐습니다. 질병 X는 '인류가 만나지 못한 어떤 병원체'가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WHO에서 예측한 질병 X의 발생 원

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혹은 '기후변화'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인간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인간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이었으며, 이 예측은 코로나19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팬데믹을 먼저 예상했던 연구자들, 특히 진보적 연구자 사이에서는 기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자본주의를 멈추고, 모두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수정하고, 생태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그들이 줄곧 경고했던 내용이 실현되었으니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림 52> 지구 역사에서 나타난 6대 멸종 사건



※ 출처: Edward J. Tarbuck, Frederick K. Lutgens(2016), 『지질환경과학』, 시그마프레스, ©Dennis Tasa

그 담론을 이끄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2000년에 대기 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제안했던 ‘인류세’입니다.⁶⁴ ‘인류세(Anthropocene)’란 인류를 뜻하는 ‘anthropos’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로서, 인류가 만든 지질시대라는 의미입니다. 파울 크뤼천은 인류가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콘크리트 잔해, 플라스틱 찌꺼기 등 인간의 환경 오염이 남긴 족적은 지층에 퇴적되면서 ‘인류세 퇴적층’을 이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대로 가면 100년 안에 생물 종의 70%가 사라지는 ‘제6의 대멸종’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류세 담론이 대중적으로 공유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인간의 책임을 비판하며 ‘인류세’라는 용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했습니다. 반면 인류세를 불편해하거나 비판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미국의 역사 지리학자 제이슨 무어는 지구 생태계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류세(Anthropocene)’ 대신에 ‘자본세(Capitalocene)’를 제안했습니다.⁶⁵ 그 외에도 인류세의 대안적 이름으로, 지구 환경의 파멸을 백인 남성 탓으로 돌리는 ‘남성 중심세’, 휘발유 산업 문제로 돌리는 ‘휘발유세’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⁶⁶

그중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주목한 개념은 여성주의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의 ‘톨루세(Chthulucene)’⁶⁷입니다. 도나 해러웨이는 인류세가 가진 인간중

심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안적 이름인 톨루세를 제안했는데요.

인류세 담론은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인간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인간의 과학 기술 발전을 추구하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연 난개발에서 시작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아닌 ‘인간이 초래한 재난’과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자연 재난으로 치환하고, 인간과 자연의 싸움으로 여기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더 많은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나 해러웨이는 인류세의 대안적 이름으로 그리스어 ‘chthulu’⁶⁸에 ‘cene’을 붙여 톨루세(Chthulucene)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톨루세는 인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 미지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다른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생태 백신’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태 백신은 “바이러스가 애당초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을 건드리지 않으면”⁶⁹ 되는 것으로, 자연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내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는데 인간에게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극복하는 대안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운신하는 폭을 적절히 제한하는 논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64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22년 구소련의 지질학자 알렉세이 파블로프였으나, 2000년 파울 크뤼천이 ‘국제 지관-생물권 프로그램(IGBP)’ 회의에서 쓰면서 본격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65 Jason W. Moore, ed.(2016),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PM Press.
 66 Schneiderman, Jill S.(2017), 『The Anthropocene Controversy』, Richard Grusin ed., 『Anthropocene Feminism』,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7 도나 해러웨이(2019),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 친족 만들기』,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2019년 봄호. 원문은 Donna Haraway(2015), 『Anthropocene, Cap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vol. 6.

68 톨루세의 톨루(chthulu)는 인간이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적 힘을 가진 땅(지구 및 자연)과 함께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러웨이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논문, pp. 166.
 69 최재천(2021),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 김영사.

두 영화가 보여주는 '뒤틀린 풍요'

저는 결국 인류가 '문명'과 '자연'을 나누고 '문명의 시작'을 '자연의 정복'으로 이해해온 사고방식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영화 <겨울왕국 2>였습니다.

<겨울왕국> 시리즈의 주인공 엘사는 특별한 마법의 힘을 타고났지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됩니다. 그런 엘사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자각하면서 아렌델 왕국의 여왕이 되는 서사는 페미니스트인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요. <겨울왕국 2>에서 엘사는 자연의 4대 정령을 길들이면서 자신도 마지막 5번째 정령으로서 각성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림 53> 엘사가 물의 정령 '노크'를 길들이는 장면



※ 출처: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그림 53>은 엘사가 바람, 불, 땅의 정령을 길들이고, 마지막으로 물의 정령을 길들이는 장면입니다. 엘사는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게 막는 '말의 형

상'을 딛 물의 정령을 얼음 고삐를 생성해서 길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문명 세계의 왕이었던 인간이 자연을 길들이고 지배하는 모습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다시 '남성-문명'과 '여성-자연'으로 나누고 '인간의 역사'를 '남성의 역사'로 만들면서 가부장제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랬던 여성이 근대 이후에 비로소 문명으로 넘어와서 아렌델 왕국을 다스리고 자연까지 길들이는 서사는 늘 문명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점에 있어서 영감을 주는 면이 있었지만, 팬데믹 시대에 이것이 정말 페미니즘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관인지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 54> 약국에서 개나리꽃액(미확인 치료제)을 사려고 마스크를 끼고 줄을 길게 선 모습



※ 출처: 영화 <컨테이션> 스틸컷,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살펴본 또 다른 영화는 <컨테이션(Contagion)>인데요.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현실적으로 묘

사한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한 이후 코로나19 시대에 재조명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반적인 영화 내용은 글로벌 기업 ‘에임 엘더슨’의 임원인 베스가 홍콩 출장에 갔다가 신종 감염병에 걸리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지는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구’와 ‘아시아’의 이분법적인 분업 체계에서 드러나는 코로나19의 발생 경로였습니다. 영화에서 글로벌 기업 ‘에임 엘더슨’의 본거지는 미국이고, 자원을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공간은 아시아입니다. 이 분업 체계는 근대 국가를 형성했던 기본 체계이기도 한데요.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 국가, 민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시장’으로 불리는 경제적인 체계이고,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갖춘 정치 체계이며, 민족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민족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결속을 다지면서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착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업 체계를 갖춥니다.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는 ‘백인-남성-문명’과 ‘비백인-여성-자연’의 이분법적 항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확립한 산업혁명, 즉 산업의 가치는 높이 사고 농업의 가치는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산업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구 증가가 필요했고, 인구 증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혁명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은 ‘자연의 미래’와 ‘식민지의 현재’를 착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200년 전 농업혁명에서 끌어다 쓴 빛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빛을 갚아야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적 진보주의자들 대다수는 자연과 식민지를 착취한 시장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근대 이후에 국가와 시장은 분리되어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 혹은 국가를 형성한 대의 민주주의의 타락과 함께 온 것입니다. 시장의 풍요가 민주주의의 평등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의 관념 자체가 ‘풍요’의 관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젠더라는 방법론: 닭고기 평등을 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까요? 저는 15년 전에 목장의 기업화에 반대하면서 채식을 했는데요. 페스코 베지테리언⁷⁰으로서 4년 정도 탈육식을 하던 어느 날, 영국의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요리를 하다가 닭을 들어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닭은 8달러에 값싸게 사 왔다. 사람들은 목장의 기업화에 반대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목장이 기업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모두가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평등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목장의 기업화는 반대하면서 인간의 평등은 생각하지 못한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채식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전을 돌아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왜 닭고기를 똑같이 나눠 먹는 수준의 평등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더 많은 평등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수많은 생명, 그리고 인간마저 해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닭고기 평등을 넘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인식론

70 육류는 먹지 않고 생선, 동물의 알, 유제품은 먹는 채식 유형을 말한다.

적 방법이 ‘젠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젠더’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성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사회 문제를 파악할 때 젠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젠더는 단순히 권리 영역의 하나이거나 정체성의 범주가 아니라 부정의와 불평등의 구조를 다루는 도구로서 적용”⁷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이야기할 때 ‘젠더’ 관점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2020년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생태, 디지털 테크놀로지, 심리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젠더 관점이 완전히 결여된 대안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안에서 온갖 재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가족이나 마을 및 공동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적 시스템인 젠더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오가는 반면, ‘돌밥돌밥(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과 같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생산 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독박으로 주어지고, 그 독박 노동을 할 여성이 없는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문제의 논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안에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스케일만 바라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의 기예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부

터 시작해서 바이러스와 만난 인간의 신체, 인간이 이루는 관계, 관계망이 만드는 국가 체계, 국가 간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전 지구적 스케일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줌인과 줌아웃을 구성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로서 우리의 신체부터 사회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젠더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손희정교수님의 답변

Q. “‘젠더’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젠더 개념이 가진 함의가 약화되고 단순히 ‘여성’의 다른 말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젠더라는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A. **손희정** | 일반적으로 젠더는 섹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죠. 섹스는 성기와 호르몬 등 신체적인 차이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음경을 타고났으면 남성, 음순을 타고났으면 여성, 음경과 음순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성기를 타고났으면 간성(Intersex)으로 분류하죠. 젠더는 그렇게 분류된 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대하는 방식이자 편견을 의미합니다. 음순을 가진 사람은 분홍색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음경을 가진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할 거라는 기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홍색에는 ‘부드러움, 수줍음, 돌봄, 감성’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파란색에는 ‘활동성, 모험, 패기, 이성’ 등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젠더는 ‘만들어진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로 자연화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젠더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이어져서 남성의 자리와 여성의 자리를 규정짓게 됩니다. 젠더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71 나영: 수수(2019), 「젠더와 다시 만나기:구조를 전복하는 인권운동을 위하여」, 『인권운동』 2호, pp. 76.

사회가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으로 규정되는 정체성에 따라 사람의 자리를 배치하는 데 관여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Q. “영화, 책 등의 콘텐츠에서 문제의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 혹은 어떤 태도로 콘텐츠를 읽어내야 할까요?”

A. **손희정** | 여성학자 신시아 인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의식하라. ‘사소한’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라. 이 두 표현은 당신이 열고 싶은 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다.” 그리고 이런 바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으로 ‘페미니스트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하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노동의 인식 및 처우 개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손희정 교수님이 바라보는 돌봄노동의 현주소가 궁금합니다.”

A. **손희정** |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노동’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돌봄노동은 여성의 본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여성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싸워서 드디어 돌봄노동이 노동의 지위를 인정받고 돌봄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집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시간이 부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여성의 가치가 아닌 인간의 가치로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Q. “‘닭고기의 평등’을 넘어서는 평등을 상상해보자고 했을 때, 손희정 교수님이 정의하는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가요?”

A. **손희정** | ‘진정한 평등’이라는 확정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추구해 가는 과정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란 결국 인간의 좁은 이해 속에서 작성하는 ‘존엄한 존재’ 리스트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경로이겠지요.

Q. “강연에서 두 가지 영화를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만한 영화 혹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손희정** | 글썽요. ‘대안’이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류가 전반적으로 시니컬하고 좌절된 상태라서 ‘대안’보다는 ‘파국’에 더 관심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최근 흥미로웠던 건 <스위트 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이라는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간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와중에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의 하이브리드 종족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간을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죠. 인간종은 하이브리드종을 ‘박멸’하고 자신들이 다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뜻도 신의 뜻도 아니고, 또 어떤 인간들은 스스로 사멸하고 새로운 종에게 지구를 물려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요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재구성 과 시민사회'

발제 2. 탈인간중심주의: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경계 넘기

은영 | 직접행동DxE 한국챕터 Lead Organizer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직접행동DxE(Direct Action Everywhere Korea, 이하 DxE)’는 DxE의 핵심 가치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풀뿌리 운동입니다.⁷² 직접행동DxE 활동가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개인이 아닌 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맹렬히 비폭력적일 것이라는 가치로 직접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왜 이 의제를 외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연대가 필요한지, 2030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동물해방을 외치는 이유

DXE 활동가들은 왜 재판관을 불사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피켓을 들고 식당 안에 들어가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도

72 '직접행동DxE(Direct Action Everywhere Korea)'는 2013년 출범한 전 세계적인 동물해방 네트워크 Direct Action Everywhere의 한국챕터를 말한다.

왜 동물해방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DXE 활동가들의 급진적인 행동은 모든 해방운동이 그러하듯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고,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어떤 차별과 폭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해방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활동가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감금되고, 학살되고 있는지 농장·수산시장·도살장 같은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도살장을 비롯한 축산시설은 지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도살장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실제로 본 적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살장은 분명한 우리의 일상이고, 도살장이 있기에 가능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55>는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일부러 자극적으로 편집되었고, 그만큼 끔찍하고, 경고 메시지가 필요한 사진으로 보이지만 현장에 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림 55> 농장·도살장 현장에서 동물들의 모습



※ 출처: DxE Korea

왼쪽 위의 사진은 농장시설에서 감금된 엄마 돼지를 공개구조한 당일에 찍은 것입니다. ‘공개구조(Open Rescue)’는 활동가들이 신변을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농장 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동물을 직접 구조하는 행동양식을 이야기합니다. DXE의 전략 중 하나인 공개구조는 모순된 합법의 영역에서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치료받은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공개구조는 지금 현행법이 정말 떳떳하고 정의로운 법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말복을 맞이한 도계장 현장에서 닭의 모습입니다. 무더운 여름, 도계장 안은 수많은 새들이 서로의 열기에 폐사된 상태였고, 병아리의 힘없는 울음소리와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또, 왼쪽 아래 사진은 피를 흘리면서 도살장에 들어오는 ‘다우너 소(Downer Cow)’⁷³의 모습입니다. 축산업자들은 젖소를 착유하기 위해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킵니다. 과도한 착유로 몸에 칼슘이 부족해진 소는 기립불능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도살장에는 갑작스러운 기립불능 장애로 다리가 부러진 소, 피를 흘리고 있는 소, 반복된 착유로 젖꼭지가 찢어진 소들이 일상처럼 보입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신선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소의 숨이 붙어 있을 때 기절시킨 뒤 바로 방혈⁷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사진은 목마른 돼지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활동가들이 물을 주면 물줄기 하나에 수많은 돼지가 몰려듭니다. 활동가들은 동물이 처한 이 끔찍하고 시급한 문제를 계속 마주했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본 것에

73 앓은뱅이 소, 기립불능 소를 의미한다.

74 도살한 동물의 몸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피를 제거하는 일. 치료 목적의 ‘방혈’과 다르다.

최대한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활동가들은 그렇게 체면을 버리고,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온몸으로 현장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현장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느낄 것을 믿고 행동해왔습니다.

문제를 묻지 않고 ‘몰어버리는’ 자본주의 사회

사실 동물해방 활동가들에게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림 56>은 환경 오염의 예로 미국 농장의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축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미국에서는 농장 옆에 호수를 파기도 하는데요. 농장에 있는 수많은 동물의 배설물, 오물, 피 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농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리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초국적 기업의 대표들은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호수의 붉은색은 자연스럽게 희석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56> 미국의 농장 현장



※ 출처: DxE Korea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메르스, 사스, 광우병, 돼지독감 등 모든 감염병은 동물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를 그렇게 집단적으로 감금하고, 학대하고, 학살하면서 아무 질병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축산업계는 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독감이 유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돼지독감’이 아니라 ‘신종플루’로 기억하도록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설령 감염병이 계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축산업이 위협받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돼지독감 때문에 살처분이 행해질 때 사람들은 모두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처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농장에서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몸집이 작아 ‘규격 무게 기준’에 맞지 않는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산란업계에서도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를 밟고 패대기쳐 죽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저 관행일 뿐입니다.

전 세계 DxE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의 활동을 쉽게 무마시킵니다. 지금 사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묵인하고 감출 뿐입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그저 병든 동물들을 묻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살처분’ 그 자체일 뿐, 살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발명’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은 다르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간은 동물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물의 삶과 존엄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갈취하기 위

해서, 이 관계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이 발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는 단순히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중심주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보면 ‘백인 자본가 남성’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는 모두 멸시의 의미가 담긴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며 착취당하는 계급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습니다. 계급 구조의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각종 산업재해, 질병, 트라우마를 겪으며 ‘비인간 동물’들을 끝없이 죽이고, ‘인간 동물’ 서로를, 아니 모두를 죽이는 폭력의 굴레를 견디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임금 노동제의 고용 관계는 지구 생명체 모두를 볼모로 하여 고유한 관계로서의 노력이나 복잡한 비용 산정 없이 마땅히 착취하고 버려지게끔 합니다.

우리 눈앞의 일을 문제로 인정한다면

DxE는 이렇게 권력적, 구조적으로 편재된 전 세계의 모든 도살장의 문을 닫을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DxE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직접행동(Direct Action)’은 단순히 폭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대중이 직접 구조에 개입하고, 폭력을 중단시키고자 저항하여, 변화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액션을 통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당하는 동물권을 앞순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직접행동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았을 일상 속의 권력을 드러내고, 통제되고 억압받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양식이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지배 권력의 부정한 법, 정책,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여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만 연간 10억 명⁷⁵의 닭이 도살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DxE는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에 경기도 용인의 닭 도살장 앞에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락다운(Lockdown)’ 시위를 벌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여행 가방에 콘크리트 200kg를 넣고 자신의 팔을 묶고 바닥에 누워 도살 트럭이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4시간 동안 막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입맛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무고한 수많은 닭이 죽는 게 맞는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의제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림 57> 2019년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 DxE 활동가들은 경기도 용인시 한 닭 도살장 앞에서 ‘락다운’ 시위를 벌였다.



※ 출처: DxE Korea

이렇게 직접행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전 세계 사회운동의 대부분이 사회변화를 기반으로 운동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에서 공격적

75 발표자는 동물을 셀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마리'가 동물을 도구화하는 단어이자 목숨(命)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을 셀 때 '마리' 대신 '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 사회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tructure(조직화)'와 'Mass Protest(대중 동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화와 대중 동원, 2가지가 성립해야 'Alternatives&Personal Transformation(제한적 변화)'과 'Inside Game(권력 내부에서의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⁷⁶ 따라서 활동가들이 학습하고 연대하여 조직화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 동원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개개인은 물론, 권력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DxE의 활동을 보고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DxE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활동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가 전체 인구의 3.5%를 설득하는 것입니다.⁷⁷ 3.5%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문제를 외치면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사회가 변화합니다. DxE는 2030년 미래에 거대하고 담대한 시민운동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일본 가수 가토 도키코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DxE가 대중들에게 제안하는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동물해방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동물해방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 나의

76 마크 앵글러, 폴 앵글러(2018), 『21세기 시민혁명 - 비폭력이 세상을 바꾼다』, 김병순 옮김, 갈마바람.

77 미국의 사회학자 에리카 체노웨스가 주장한 '3.5%의 법칙'을 말한다.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비폭력 시민저항운동은 성공한다는 이론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나’라고 고정된 위치를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자본이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명령한 위치를 벗어나서 생각해보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급진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이지 못한 삶, 말하지 못하는 고통, 차별과 혐오를 받는 것이 당연시된, 비정치화된 존재로서 그 존재에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로서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항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내몰지 않고, 수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우리’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우리의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은영 활동가님의 답변

Q. “강연에서 DxE의 직접행동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축약되어서 아쉬웠습니다. 직접행동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강연에서 못 들려주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은영 | 직접행동은 지배 권력에 부당한 힘이 편재된 상황에서 억압받는 이들이 부정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되찾는 ‘정치적 주짓수’입니다. 기득권의 분노는 제도화되어 자본과 악법으로써 운동을 억압하고, 억압된 민중의 정당한 분노는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폭력 행위로 낙인찍히기 일쑤죠. 이때 직접행동은 지배 권력이 정당화하는 폭력성을 극적으로 드러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묵인되었던 부정의를 전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종양이 감추어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고 공기과 빛에 노출되어야 자연적인 치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존재했

지만, 의도적으로 감춰졌던 불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양심’이라는 ‘빛’과 ‘여론’이라는 ‘공기’에 노출되어 치유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흑인민권운동은 의도적으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긴장감을 조성하고 노골적인 폭력을 드러내어 당시 만연했던 인종 차별과 혐오의 뿌리를 비로소 대중에게 마주하게 했던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DxE 또한 도살장과 농장 같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직접 보고 마주했던 끔찍한 현장의 경험을 도시로 돌아와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장소에 들어가서 노래와 스피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공간에 상존하는 정치적 문제를 혁명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마치 지금 도래한 것처럼 행동할 때, 묵인되었던 폭력이 드러나고 당연히 되었던 일상에 사회 변화를 위한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Q. “DxE의 동물권 활동을 보면 직접행동이 강조되는데 직접행동이 아닌 다른 노력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탈육식을 시작하는 등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다른 실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은영 | 보통 동물해방운동에서 ‘용기 있는 운동’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직접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그 너머에 서포터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액션을 지지하고, 함께 논의하고, 관계를 맺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육식’도 좋지만, 개인적인 실천에 대한 논의를 넘어 관계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 ‘저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만나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가 가진 공동체 안에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변화해가는 행동들도 저는

직접행동을 이루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직접행동을 준비할 때 “짧은 시간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연습도 많이 한다”⁷⁸고 말씀하셨는데요. 액션 그 너머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은영** | 액션마다 준비과정이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현재의 운동 상황에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의식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잡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액션의 중심이 그려집니다. 이번 직접행동에 어떤 장소와 날짜, 시간, 요일, 구성원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장치를 고려하고, 기획이 잡히면 답사와 해당 액션에 요구되는 트레이닝을 준비합니다. 액션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 구성원의 성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성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액션의 개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 인원의 성격, 능력, 훈련 정도,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전·사후 언론 작업을 비롯해서 액션 이후의 서포트 작업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략에 따라 사전 액션에 따른 후속 액션을 이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Q. “2019년 6월에 DxE 한국챗터는 첫 ‘방해시위(Disruption)’를 전개⁷⁹했

고, 2022년 3월에는 활동가들의 거점 공간인 서울 동물권센터까지 마련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대중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외에도 활동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A. **은영** | 먼저 직접행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또, DxE의 직접행동이 한국 사회운동에 운동 방식의 창의성을 일깨우고 저항운동으로서 용기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다른 사회운동에서 직접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과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직접행동을 매개로 운동 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DxE는 한국 사회에서 동물해방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을 만들고 논의의 바탕이 되는 생생한 운동의 증거를 대중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론이나 통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이 모여 구체적인 동물을 마주한 것입니다. 직접행동의 액션으로 구체적인 용기가 발현된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고 느낍니다. 동물해방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감수하는 활동가들이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만으로도 동물해방 담론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권리장전의 궁극적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도살장 점거의 시민불복종운동의 재판 투쟁을 진행하면서,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동물해방의 미래를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Q. “동물해방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또, 현재 한국의 동물해방운동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A. **은영** | 동물해방운동은 현대 공장식 축산업이 태동한 ‘축산업의 중심지’인 북미권,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78 민(2022.01.03),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식당에서 외치는 이유”, 《닷페이스》, https://articles.dotface.kr/extremely1?utm_source=direct_link&utm_medium=share_btn&utm_campaign=extremely1 (검색일: 2022.05.04) 참고.

79 섬나리(2021.06.21),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한 마디가 불러온 나비효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00191.html(검색일: 2022.05.04).

이루어집니다. 흔히 동물권운동은 돈 많은 백인들의 운동이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거대한 초국적 축산 자본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동물해방운동은 문화적·지리적으로 동물해방운동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3년 만에 초법적인 행동을 모두 해냈습니다. 이동할 차 한 대 없이 부족한 기반으로 공개구조, 락다운 등 모든 급진적인 행동양식들을 한국 사회에 실현해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DxE 한국챗터가 진행한 한국의 동물권 시민불복종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미국 동물해방컨퍼런스(Animal Liberation Conference·ALC)⁸⁰의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물해방운동은 전 세계에서도 중요한 사례이자 용기로 학습되고 있습니다.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재구성과 시민사회'

발제 3. 신호와 감지: 활동의 변곡점을 찾아서 - 2021 NPO 트렌드 리포트를 중심으로

박아영·안연정 | 2021 NPO 트렌드 리포트 연구진 / 포럼 일자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에 내재된 깊은 틈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미뤘었던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가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은 근본적인 토대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위기'로 읽히는 수많은 신호가 교차하는 시기에 변곡점을 지나면서 국외 비영리 활동 사례를 통해 그 신호를 감지해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연은 '2021년 NPO 트렌드 리포트: 신호와 감지'⁸¹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국외 비영리 활동 사례와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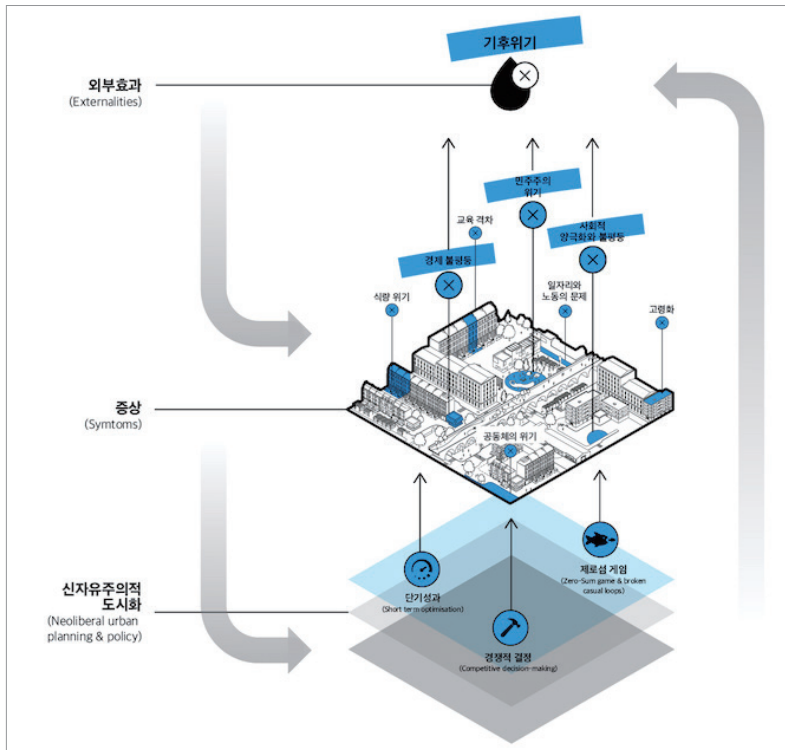
80 DxE가 주최하는 연례행사. 각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풀뿌리 활동가들이 모여 네트워크 형성, 동물권 운동에 대한 트레이닝, 동물을 위한 담대한 액션을 7일간 진행한다.

81 www.snpo.kr/data//file/npo_aca/1893498642_BSLHvRfn_2021_NPOED8AB8EBA08CEB939CEBA6ACED8FACED8AB8_EC8BA0ED98B8EC9980EAB090ECA780_EC8B59CECA285.pdf.

선정되었는지 내러티브를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러티브: 변곡점을 들여다보다

<그림 58> 코로나19가 보여준 구조적 문제의 복잡성



※ 출처: DML(Dark Matter Labs, 이하 DML)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12월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두 사회적인 단절, 경제 침체, 보건의로 시스템 과부하 등 즉각적 위기에 대응하는 ‘반응 모드’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다행스러운 이유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사회 문제가 ‘우리 모

두의 이야기’라는 공동의 인식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달라질 세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 어떤 공통된 기반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해보고자 ‘내러티브’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내러티브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의 ‘복잡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시 내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문제와 같은 가시화된 사회적 취약성은 신자유주의 도시 계획과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표면적 증상입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는 기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삶의 조건을 바꾸고, 이는 또다시 도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희 연구진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어 줄 현장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찾아낸 현장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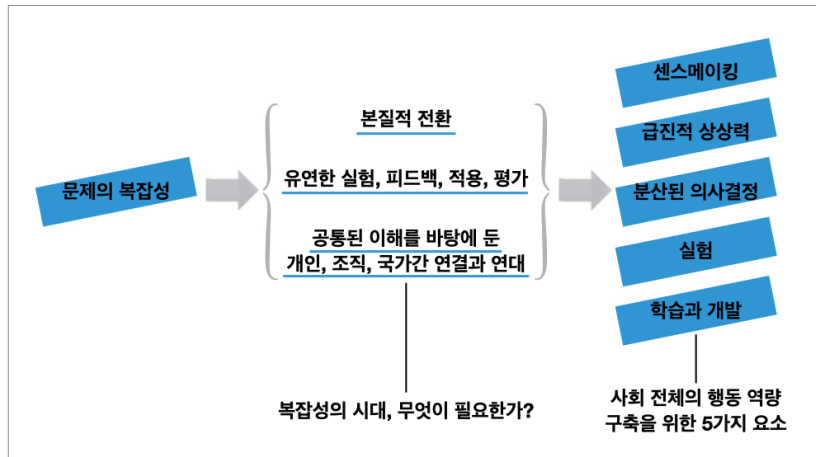
먼저 첫 번째는 ‘대안적 서사(Alternative narratives) 및 변화 이론 만들기’입니다. 생활방식의 변화, 내면의 변화 혹은 정치적 실천, 근본적인 제도 변화 등 서로 다른 서사의 다양성을 상호 보완하면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관계적 가치와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전환 계기 및 전략을 구축하고, 포용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기 위해 공개된 플랫폼을 구성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한(수정 가능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동료 시민들의 학습과 실험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차적 혹은 통합적 시도를 통해 집합적 효과(Collective Impact)를 이끌어내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동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행동 역량 구축의 5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59> 전환을 위한 행동 역량 구축



※ 출처: DML

- **센스메이킹(Sense-Making)**: 우리 사회 전체의 복잡한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량에 맞게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 및 사회 전반의 주체적 문제 인식을 말한다.
- **급진적 상상력(Radical Imagination)**: 새로운 관점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상상력, 발명 및 혁신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 **분산된 의사결정(Distributed Decision-Making)**: 장기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풀뿌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과 의견을 다양

하게 수렴하는 것은 물론, 이 의견들이 현장 단위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의사결정의 권력이 분산된 구조가 필요하다.

- **실험(Experiment)**: 개인과 공동체, 시민사회, 기업, 정부 조직 등 우리 사회의 개별 주체가 다양한 상상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의 기회를 유연하게 가져야 한다.
- **학습과 개발(Learning&Development)**: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솔루션은 없다.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워크와 조건을 폭넓게 살펴보고 다양한 선택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경험을 망라하는 지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는 실험 과정을 개발하고 결과를 학습하며 만들어진다.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두의 행동 역량이 필요한 이때, 과연 시민사회는 구조적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정부 및 기업,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리적 행동에는 제약이 생겼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활동의 규모와 비중은 확대되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 기반을 확장하면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활동 모델, 시민 활동의 경로 다각화 등 새로운 ‘시민 행동주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조직은 이러한 흐름을 끌어안고, 관점 전환과 역량 준비를 통해 팬데믹 이후의 시기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이러한 시각으로 ‘2021 NPO 트렌드 리포트’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요소에 비춰 팬데믹이 불러온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체와 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그중에서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달라진 감각’입니다.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처럼 이전에는 ‘타인의 문제’로만 여겼던 사회 이슈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취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치적 사건과 운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이 주도하는 긍정적 변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데 비전통적 참여자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지지했고, 작년의 같은 기간 대비 청원은 80% 증가했습니다.⁸²

두 번째 흐름은 ‘집합적 연대의 힘’입니다. 시민들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달라진 감각을 통해 연대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엮어내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 가진 미덕인 분산화된 연결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으며, 온라인상의 활동은 다시 오프라인상의 시민 행동과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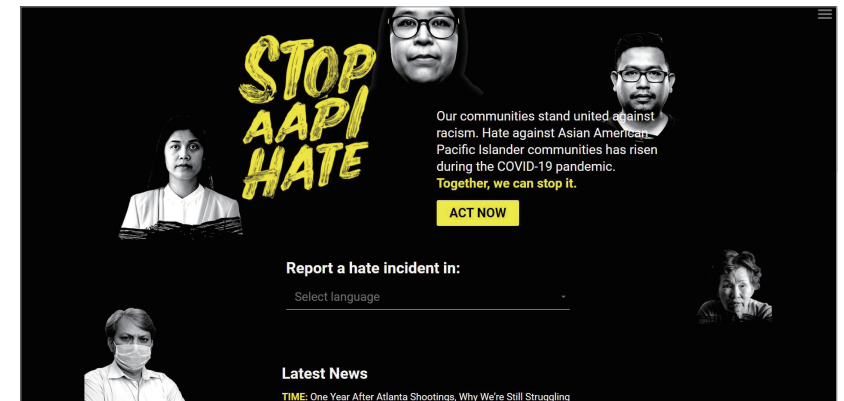
세 번째 흐름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공간의 확장을 넘어 새롭게 만드는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82 Harriet Barber(2020.8.26), "Covid-19 has ushered in a new era of digital activism - and global leaders are listening", 《The Telegraph》, www.telegraph.co.uk/global-health/climate-and-people/covid-19-has-usherred-new-era-digital-activism-global-leaders/(검색일: 2022.05.07).

따라서 오늘 강연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달라진 감각, 집합적 연대의 힘이 두드러지는 스톱 AAPI 헤이트,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사례와 거기에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진 조글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스톱 AAPI⁸³헤이트(Stop AAPI Hate)’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생존과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고, 혐오와 차별의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레 사회적 약자에게 향했고, 미국 사회 내 소수자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범죄’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2021년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⁸⁴이 도화선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60> STOP AAPI HATE 웹사이트



※ 출처: STOP AAPI HATE

한편 이럴 때일수록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의

83 아시아인 태평양양계 미국인을 의미한다.

84 홍희정(2021.03.18), "미 애틀랜타서 1시간 새 3곳 연쇄총격. 한국계 4명 숨져", 《JTBC》,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760(검색일: 2022.04.24).

메시지를 발신하고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 비영리 단체 ‘스톱 AAPI 헤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활동의 첫 시작은 #StopAAPIHate(아시아인 혐오를 멈추시다)라는 소셜 미디어상의 해시태그 운동이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차별당한 경험과 주위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온라인으로 전파되면서 단숨에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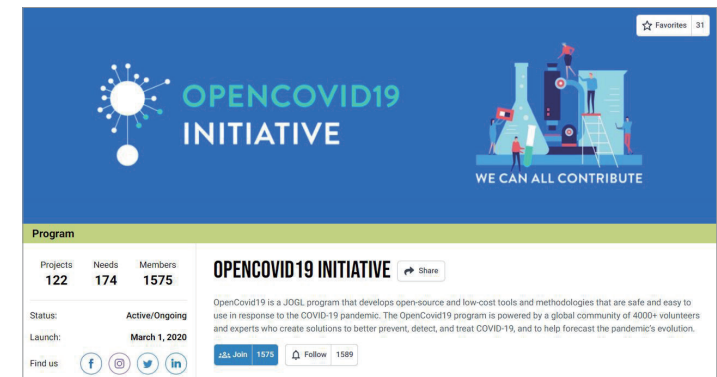
특히 스톱 AAPI 헤이트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연대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이 단체는 정부 당국의 미비한 대처로 구멍이 난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출신을 고려해 온라인상에서 11개 언어로 차별과 증오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범죄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의 여러 지원 방식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톱 AAPI 헤이트는 계속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객관적 실상을 알리고,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사회 전반과 정치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입니다. 대부분 2~30대 기후 활동가로 구성된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이전 세대가 기후변화의 위협을 무시하고, MZ세대가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막는 동시에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뉴딜정책’을 지지하는 대규모 운동을 만들었고,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하는 정치 행동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 결과,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기후운동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다층적인 활동 전략에 뛰어나며, ‘35+ 서포터 가이드라인(35+ Supporter Guidelines)’⁸⁵을 만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향후 운동 방향과 방식을 재구성하는 ‘선라이즈 2.0(Sunrise 2.0)’을 설계하고 피드백을 취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더욱 발전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명 공학 분야의 연구방식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조글(Just One Giant Lab·JOGLE)’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조글은 학생, 아마추어, 의사, 학자, 기업가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가상 실험실(Just One Giant Lab)’을 표방합니다.

<그림 61> Open Covid19 Initiative 웹사이트



※ 출처: 조글

85 Sunrise Movement(2020), 「Sunrise 35+ Supporter Guidelines」, docs.google.com/document/d/1KssschPmgbycRhva9ECOajN7b4moQlQIT0-oMSDkk3s/edit.

조글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오픈소스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한 ‘오픈 코로나19 이니셔티브(Open Covid19 Initiative)’를 통해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183개국 6만 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그중 3천 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마스크 디자인부터 저가 인공호흡기 프로토타입, 기침 감지 AI 앱까지 90개 이상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참여자의 집단지성 방식을 통해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속도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맞춰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춰 아이템을 추천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처럼 다양한 회원들과 관계자를 연결하거나 프로젝트를 매칭할 때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의 재능을 알맞은 프로젝트에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선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조글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지속 가능한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국외 비영리 활동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나머지 내용은 ‘2021 NPO 트렌드 리포트’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알아보고, 변화의 지점을 이해하고, 해석력을 키우면서 우리만의 맥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박아영·안연정 연구자님의 답변

Q. “2021 NPO 트렌드 리포트’는 이번 포럼의 주제이기도 했던 양극화,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혐오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요. 4가지

키워드에 부합하지 않아서 리포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박아영** | 네 가지 주제에 걸친 사례를 찾는데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쓴 것 같아요. 다만 키워드와 관련해서 2021년 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사례를 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사례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여서 가능성만 보여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내에도 알려진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 개념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흥미로운 시도를 하는 뉴질랜드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 뉴질랜드에 다녀오면서 뉴질랜드 사회가 가진 지구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나 전 세계를 향한 열린 태도,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글도 썼던 터라 눈길이 갔죠.

코로나19가 가져온 문제의식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생태 지향적인 도시를 위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시도와 방법, 이론적 배경이나 재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았어요.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이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보고 싶어요.

Q. “K팝 팬덤이 다른 팬덤 문화와 다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K팝 팬덤의 액티비즘이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A. **박아영** | 오래전부터 K팝의 팬 문화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특유의 조직력을 자랑해왔어요. 여기에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팬들이 유입되었고, 팬덤 공동체가 질적·양적으로 팽창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응원한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해서, 다양성에 대한 기본 감각을 가지고,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통분모를 갖는 이슈나 의제를 제안하면 공감의 반응이 매우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으면 소위 ‘덕질’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중이 높은 팬덤 활동에서 터득한 다양한 온라인상 전략이나 요령 또한 팬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빠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죠.

K팝 팬덤의 주축인 MZ세대는 아티스트와 자신을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몇 가지 활동을 통해 이미 효능감을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유지될 거예요. 전문가들도 K팝 팬덤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K팝 팬들의 사회정치적 액티비즘은 내외부적으로 조명받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껏 공동체를 형성해온 방식과 과정,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과 학습 역량 안에서 자정 능력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덕질이 어디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A. **안연정** | 제가 기억하는 K팝 팬덤은 ‘서태지와 아이들’부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팬덤과 다르게 K팝 팬덤은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음악적 메시지와 시대정신, 패션 등과 연결되어 통합적인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조직 운영 능력은 K팝 팬덤의 역사 속에서 자가 발전해왔고요. 특히 지금 K팝 팬덤의 주축인 전 세계 MZ세대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공통으로 목격하고 감각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다고 생각해요.

2021년 11월, K팝 팬들이 주도하는 기후행동 플랫폼 ‘K팝포플래닛(KPOP for Planet)’은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으로 추산되는 K팝 팬덤의 규모라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죠. 경계 없는 연대와 팬덤의 규모, 그리고 개인 모두가 가능한 선에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감각이 탁월한 MZ세대의 문화라면 새로운 액티비즘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다양한 국외 비영리 현장 사례 중에서 국내에서도 도입해보거나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안연정** | 조글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오픈 인프라(Open Infra)와 오픈 데이터(Open Data)가 규모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시민과학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비롯해서 ‘시빅해커(Civic Hacker)⁸⁶’들의 활동 흐름이 존재했는데요. 국외 비영리 현장을 조사하면서, 특히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

86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하여 도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개발자,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 시민운동가, 기업가, 정부 직원 모두가 될 수 있다.

는 과정에서 집합적인 힘을 만들기 위한 자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A. **박아영** | 저도 특정 사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 방식이나 활동 전략을 중심으로 삼는 흐름이 눈에 띄었어요. 작년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디지털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데이터 소유나 활용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기업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비영리 영역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비영리 활동의 방향성, 전략, 운영 부분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거나 접목하는 논의와 시도가 구체적으로 풍부해진다면 생길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의 노력으로 사회적 압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박아영** | 개인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산업 영역의 변화, 그리고 이를 규제할 힘이 있는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위기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태어나보니 이미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청년 세대

의 절망이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활동에서 크게 느껴졌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 구조 안에서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선라이즈 무브먼트도 그 점에 주목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이런 성취의 방식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청년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다른 연구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금의 국내 환경은 정치·경제적 자원이나 수단을 갖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5차 포럼에서 함께했던 ‘DxE’의 방식처럼 글로컬(Glocal)하게 연대하고 활동하는 주체가 더 많이 등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3.5%의 사람이 모인다면,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중심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A. **안연정** |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의 활동을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2021년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계획’에 반대하며 청소년-청년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후단체들의 연대인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회복력 있는 지구, 일상을 지키는 사회, 그리고 희망을 꿈꾸는 삶을 원하는 청년들의 비전이 담겨있으며 과감성, 형평성, 현재성, 포용성, 공존성 그리고 투명성을 원칙으로 만들어졌다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2040년 기후중립(모든 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예측(Forecasting)이 아닌 역산(Backcasting)한 경

로의 시나리오⁸⁷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감축 로드맵 구축을 위한 주요 전제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개인, 단체를 위해 내부 해설서를 작업하는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대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체적 제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한국에서도 사회적 압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2040 기후중립시나리오'를 작업한 청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박아영 연구원의 입장과 유사하여 생략합니다.)

Q.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큰 흐름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인 것 같은데요. 기술의 발전은 시민 활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등 차별과 혐오가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A. **박아영** |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과 혐오의 문제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죠.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일반 뉴스에 비해서 6배나 빨리 퍼진다⁸⁸는 MIT 대학의 연구 결과나 최근의 딥페이크(Deepfake)⁸⁹ 기술을 접할 때면 걱정을 넘어 무서워지기도 해요.

인류의 지성을 발휘해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기술이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짜뉴스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왔고, 결국 지금의 상황도 온전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짜뉴스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거부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교차 검증해서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87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2021), 「청년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https://www.2050cnc.go.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85.

88 강건택(2018.03.09), “가짜뉴스, SNS에서 진짜뉴스보다 6배 빨리 퍼진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9017700009> (검색일: 2022.05.16).

89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NPO의 시선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SNPO 2022-B-001)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화 02-734-1109
팩스 02-734-1118
대표메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www.snpo.kr

이 책에 수록된 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